

第28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10 號

國會事務處

2009年2月18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o 의원신상발언 77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지금 방청석에는 백성운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 고양 일산 동구 지역구민 37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07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
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종료
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법 의안은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정된 법 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제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말 뜻을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

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의원 경기도 안산 출신
민주당 천정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늘이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늘을 대신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치주의는 권력을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잘라 말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습니다.

인내천이라고 아시지요?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은커녕 권력
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중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수
국민이 소수 세력에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목숨과 생계를 구걸해야
했으니 이렇고도 중산층
과 서민이 어찌 이 나라
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마저 법으로
다스리

는 연산군 시절 같은 폭압·감시 정권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머슴인 권력이 주인에 대해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첫째,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둘째, 다수 국민의 고향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셋째,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넷째,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어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다섯째,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여섯째,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일곱째, 마침내는 임시정부와 항일 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 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 이 일곱 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꾸었던 747이었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자백받고자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쿠데타의 목적은 국민의 입과 귀와 손발을 묶고 소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탐욕의 쿠데타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용산에서는 여섯 명의 소중한 목숨이 불탔습니다. 그날 국민의 마음도 함께 불탔습니다. 민주주의, 희망, 미래가 참혹하게 불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살리고자 한 소박한 촛불을 이 정권은 색소 든 물대포로 제압했습니다.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쿠데타를 자행할 때마다 항상 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여섯 명이나 희생되어도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법은 무엇이고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

법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치란 권력자 또한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의 가면 뒤에 숨어서 영구 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논리라는 걸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MB악법 밀어붙이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테러이자 쿠데타인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은 역사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 또한 역사에서 유죄임을 엄숙히 선언코자 합니다.

이명박 쿠데타 정권 아래에서 국민 대중은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무한경쟁만이 절대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실종되었습니다. 민생은 과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와 교육과 기회의 대물림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의 신분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에 비판적인 교사, 마우스탱크가 되기를 거부한 정부와 국회의 연구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 분야에까지 고소영·S라인의 친위부대와 공안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지키며 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이 나라 안에 지옥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집과 교육, 일자리는 서민 대중의 절박하고 거룩한 요구입니다. 생존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 대다수 국민이 교육·일자리·주거·보건 의료 등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거침없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부자를 위해 감세를 단행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과 자영업자를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죽음의 재개발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개발을 비롯한 이른바 녹색뉴딜은 푸른

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회색빛 미래에 불과합니다.

토건 방식의 개발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으로는 미래 경제의 성장은커녕 당면의 위기 극복도 민생의 안정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후면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국민은 그 후에도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민생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국정의 기초를 180°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나라도 살리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건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총리는 이번에 새로 개편된 경제팀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을 통할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그리고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아니, 건의하실 예정이 있냐고 하니까 동문서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경제팀이 바뀐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이 팀들과 함께 우리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총리께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닮아 가시는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닮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닮았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매우 어려웠던 청소년기의 역경을 딛고 드디어 일어나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 인터넷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았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 대정부질문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느 누리꾼이 이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게 수많은 의견과 질문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네티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시간상 제약으로 안 된 부분들은 추후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이 누리꾼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어느 지적에 대해서요?

○천정배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은 것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이다……

(장내 소란)

○국무총리 한승수 인터넷을 보낸 분의 본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야말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 총리께서도 대통령과 닮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입니다.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습니다. 규모만 작을 뿐이지 질적으로는 그에 못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과 합동작전을 벌였습니다.

누리꾼 치국평천하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용역 직원을 행정보조인으로 인정했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 행위는 곧 행정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질문입니다.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썬요, 용역 관계자에 대한 불법 여부는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이번 용산참사 사건을 광주항쟁과 동격으로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정배 의원 그것 묻지 않았습니까. 총리, 묻지 않았고요.

제 질문은 행정보조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행정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누리꾼의 질문입니다.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발송 건은 개인……

○**천정배 의원** 아니, 질문드리지도 않았는데 제 발이 저리시는군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천정배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치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총리께서 제 발이 저리는데요. 그 질문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를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저는 ‘패륜메일게이트’라고 규정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이 패륜메일게이트를 은폐하고자 최소한 일곱 번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당사자도, 메일을 받은 경찰 홍보담당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 고위층이 이 모 행정관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경찰의 홍보담당관에게도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강요행위는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사안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입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알이 밝혀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청와대 메일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즉각적인 특검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정배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는 길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과오를 시

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뿐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용산참사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난 1월 20일에 담화문을, 또 긴급현안질문 때도 그랬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용산사고 관련해서 라디오연설 두 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천정배 의원** 대통령께 사과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국민의 대표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방자하게 답변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미 깊은 유감의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정배 의원** 사이버모욕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입니다.

청와대와 경호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작년 9월까지 총 27건의 권리침해 정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경찰도 5건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들이었습니다. 쥐박이, 땅박이, 2MB 이런 표현들과 비판적인 패러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리!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비판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서 검경을 동원해서 탄압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국가원수를 이와 같이 천박한 용어를 사용해서 비난한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익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타인의 인격에 모욕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지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거나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총리!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말씀을 더…… 다만 오프라인상 모욕 행위는 면전에서 음성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마는 대부분 문자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모욕 행위는 퍼나르기를 통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이와 같은 임팩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천정배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저널리즘 미디어 분야 즉 뉴스를 다루는 방송은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우선하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재벌의 영향력과 보수신문의 독과점이 심각한데 방송저널리즘까지 장악하면 누가 그들을 견제하며 누가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줄 것입니까?

총리는 방송악법 추진과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법안은 국회에 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미디어 관련 법안은, 지금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께서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신산업의 경우는 지난 수년 동안에 거의 3, 40배 성장을 했는데 방송은 칸막이 때문에 2조에서 3조 6000억 정도인 가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미디어의 칸막이를 뜬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통신과 방송이 함께 성장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천정배 의원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공영방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 공영방송의 편파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마이동풍이군요.

질문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쿠데타가 역사에서 중국적으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저력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

다.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쿠데타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여러분께 성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효재 의원의 소개로 서울성북을 지역구민 7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효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의원** 말이 비루해지면 사회가 좀먹고 썩는다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음 발언을 대기하느라 이 앞에서 기다렸습니다마는, 저는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말의 쿠데타를 들었습니다. 온통 ‘쿠데타’라 했습니다.

쿠데타가 뭐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2년 전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데타 세력입니까?

말은 한다고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만 기록에 남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께서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놈의 헌법’이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 밑에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분이 누굽니까?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이십니다.

‘그놈의 헌법’이라 말했을 때 무엇하시고 이제 와서 전 국민이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쿠데타’ 운운하십니까?

방송 장악한다 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방송 장악한다 하셨습니다.

그 장악된 방송이 한 달, 두 달, 석 달 내내 잊지도 않은 광우병을 부추겨서 온 거리를 마비시키게 했습니까? 그게 장악된 방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형오** 잠깐만요, 김효재 의원, 중지해주세요. 시간 재지 마세요.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자, 이제 의석에서 얘기할 만큼 다 했죠?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발언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의 민주당 의원이 얘기할 적에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나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거 곤란합니다.
 그리고 역대 의사 보니까요 의석에서 큰 소리 지른 사람 그 다음 회기에 잘 안 보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요 이제……
 (장내 소란)
 의장이 얘기하고 이럴 때는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하세요.
 이제 실컷 얘기할 만큼 여러분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방청석에도 많이 와 있고 국민들도 듣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의석에서 이제 좀 들어주세요.
 듣고 꼭 발언을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의장이 적절히 소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효재 의원 발언 시작해 주세요.
○김효재 의원 그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기고 가신 사랑과 빛이 이곳 의사당에도, 이 혼탁한 의사당에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를 씻고 좋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엇그제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미국의 휴대전화 시장에서 세계 부동의 1위 모토로라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세계 챔피언 소식 못지않게 제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 부풀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2007년에 두 회사의 점유율의 합이 모토로라 한 회사를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저

회가 1등을 완벽하게 제쳤습니다.
 휴대전화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TV 시장 역시 삼성이 26.1%로 TOP5에 포진한 일본의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을 합한 것과 버금가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기업인 LG 전자와 합할 경우에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각자들의 앞선 투자와 기업가 정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선각자들의 정신을 제 가슴 속에 새기면서 몇 가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엇그제 낸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김효재 의원 보고서 내용이 뭐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 규제 완화를 했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주제로 한 보고서였습니다.
○김효재 의원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핵심 내용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 연관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효재 의원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국회에 산정책처에서 바로 정보통신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효재 의원 그 보고서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KISID의 보고서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재 의원 그렇습니다.
 (아이팟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애플컴퓨터에서 나온 아이팟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지하철에서 이런 것을 귀에 끼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듣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김효재 의원 (워크맨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니의 워크맨입니다.

아날로그시대의 강자는 소니였습니다. 바로 이 음원 시장에서 소니는 이 워크맨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이 아이팟을……

지금 이 기기 보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없습니다.

○**김효재 의원** 그 이유는 바로 아날로그시대의 행동 양태로 디지털시대를 규정하려고 하다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소니의 굴욕은 바로 오늘의 행동 양태를 잣대로 내일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세상을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로 통신정책연구소의 보고서가 과장된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융합시대의 시장을 그렇게 쉽사리 아날로그시대로 재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디지털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날로그식 방법 가지고는 이 시대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없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 국력과 국민의 문화 수준, 생활양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의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 다녀오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김효재 의원** 어느어느 나라에 다녀오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김효재 의원** 프랑스에서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프랑스에서는 규제기관 대표 그리고 문화부장관,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김효재 의원** 그분들도 디지털시대에,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상당히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토로하던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프랑스의 경우는 미디어 산업이 지체되어 가지고 세계적 미디어그룹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직년 취임한 이후 방송·미디어 개혁을 위해서 열정을 쏟은 결과 지난 2월 5일 날 미디어

기업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미디어 개혁의 시대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BBC방송을 중심으로 알찬 방송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효재 의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글로벌 미디어 챔피언을 만들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사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미디어그룹이 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는 대표적인 미디어그룹이 세계 수준에서는 16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미디어 디지털시대를 향한 준비 작업으로 미디어그룹 육성에 관한 의지를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혔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효재 의원** 표를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시중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문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부국이라고 생각하는 프랑스가, 바로 프랑스의 최고 미디어그룹이 차지하는 위상은 세계 미디어그룹에서 16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Vivendi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은 Time Warner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고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 30위까지의 그룹에 한국은 없습니다. 지금 KBS가 2007년 매출액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EBS 교육방송을 모두 합해도 1조 5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MBC는 지방 MBC를 모두 다 합해도 1조 2000억 원이 안 됩니다. 아마 저 순위를 다 따진다면 50위권 밖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우리나라도 세계에 나설 수 있는 미디어그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국회에 법안화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재 의원** 유럽을 방문하시는 동안에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디지털 환경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김효재 의원** 역시 표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희들의 디지털 환경에 관한 세계 순위입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3위였습니다. 단 1년 만에 대한민국이 8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논란으로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사이에 벌써 다섯 계단이나 뒤편 떨어진 겁니다.

디지털시대의 한 달은 아날로그시대의 10년이고 디지털시대의 1년은 아날로그시대의 100년입니다. 지금 이럴 틈이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환경을 저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서 디지털방송 개시일이 매우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효율성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진작 당초에 2010년에 디지털화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2013년으로 미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 부족, 정부의 홍보 부족, 디지털 시설의 준비 지체, 정책적인 불일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재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허한 논쟁에 빠져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을 허송세월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저희들 한국은 디지털에 관한 한 세계 최일류 강국입니다. 원래 97년도에 디지털방송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2010년도에 그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왜 지체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체제의 방식이 미국 방식이나 유럽 방식이나 하는 문제의 갈등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김효재 의원** 예, 맞습니다. 1997년도에 결정된 것이 2000년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방식은 곤란하

다, 미국 방식은 검증이 안 된 것이라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MBC와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방식이라면 모든 것이 싫다, 그래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실험을 하자 말자, 3년여 동안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다시 알아보니 미국 방식도 유럽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너무 큰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 원래대로 미국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게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재 의원** 그 당시에 4인위원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인이 무슨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KBS 사장, 언론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이 포함된 논의였습니다. 그 논의를 최종 중지부를 찍으면서, 4년간에 관한 논의를 중지부를 찍으면서 당시 KBS 이사회에서 했던 KBS 사장의 발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04년의 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유럽식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도 대체 사회적 비용이나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숫자는 없더라도 상당한 숫자라는 것은 대강 동의를 했다, 사회적 비용이 한 30조원은 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새만금을 뛰어넘는 사회적 비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 발언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잘 몰랐습니다.

○**김효재 의원** 이게 바로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이 4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원위치 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4년을 허비하는 동안에 경쟁국들이 저희들을 앞질러서 미디어 3등에서 저희들을 8등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원인도 상당히 작용되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의원** 이제 그 논란을 잠재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통신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우리는 2012년 말 아

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시대에 나가게 됩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는 IT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2012년 전후로 해서 디지털시대가 바야흐로 전개됩니다. 그 시대에는 단연코 우리가 앞장선 선두그룹에 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역량과 기술과 의지가 합해진다면 디지털시대 선두주자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으로 나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선진화시키는 커다란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감사합니다.

○김효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한승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미디어 융합시대,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법령정비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18대 국회, 저에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프랑스 의회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의 어느 연구소에서, 핀란드의 어떤 방송국에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 법은 지금 즉시 논의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토록 입만 열면 외치는 서민 중산층들이 2013년 1월 1일 신새벽에 일어나 TV가 먹통이 되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최고의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세계 미디어시장을 석권하는 날을 저희들은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걱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바로 한 세대 전 언론 암흑기를 온몸으로 경험한 입장에서 자라 보고 놀란 손이 슬뚜경 보고 놀란 바로 그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암흑한 시절을 겪는 동안 저도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기우라고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누가 감히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누가 감히 언론을 지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제 발언이 제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내일 아침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먹칠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정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제도로 막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언론 장악, 그리고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에 세계는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시대의 논리로 디지털세계에서 소멸되어 버린 소년의 굴욕, 그것은 저희들에게 반면교사입니다.

기회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불재래,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디어법 논의는 지금 즉시,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Now or never!’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효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玲愛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입니다.

사회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 가며 연쇄 살인범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가임기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가공할 만한 규모로 낙태가 이루어지며 존엄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불치병을 치료하고 유전자 식품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꿈같은 이야기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생명공학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이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생명산업으로 발전하여 가져올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는 올바른 지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약한 생명,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인 배아·태아와 말기환자의 문제와 국가정책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차병원이 인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승인 신청을 한 것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보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배아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인간의 생명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원초적인 모습도 배아였습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연구입니다.

199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단 하나의 치료제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5일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고 파괴하는 것이 요구되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였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운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뿐만 아니라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성의 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난자 채취는 크고 작은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난소과자극증후군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의 성체조직인 골수, 머리카락 뿌리, 피부,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치료용으로 사용되어 많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의 제임스 톰슨 교수가 인간의 체세포를 역분화하여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iPS)를 만

들었습니다.

인간의 체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출현으로 인간의 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는 더 이상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 낸 이안 윌머트 교수도 배아 연구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iPS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독일은 그동안 윤리적인 이유로 인간배아 실험을 금지하여 왔으나 iPS 생성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 각국이 iPS 연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간생명을 파괴하면서, 치료성과도 없고, 더 이상 전망이 없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우리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정부 부처 간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기반기술을 연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상적용기술 개발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상적용 단계인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지원해 왔고 작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iPS 역분화 방식 줄기세포 연구도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주신 배아 및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 엄격한 제한하에 엄격히 심의하여 승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신청 중인 차병원 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날지 여부는 심의가 끝나 봐야 알겠고 앞으로 연구의 진행 상황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玲愛 議員**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해야 하는 낙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유엔인구기금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8년 출산율은 가구당 1.2명으로 세계 최저이며 2008년 인구성장률은 0.31%에 불과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출산율은 1.89명이고 아일랜드의 출산율은 1.96명으로서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5명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육아 아동수당, 출산·육아휴가 제도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고, 아일랜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을 높여 주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로서 깊은 신앙 때문에 낙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낙태 방지입니다.

정부가 인구증가 정책을 채택한 1996년 이래 여러 가지 출산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여기서 낙태에 관하여 보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낙태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9조는 부녀가 낙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0조는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73년에 인구증가의 억제를 통한 1인당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하면서 형법상 범죄인 낙태행위를 사실상 자유화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996년에 이르러서는 인구증가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낙태 자유화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삭제되지 않고 아직도 낙태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인구증가 정책의 실현과 관련하여 중대한 직무유기를 해 왔다고 단정하는데 장관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여성계로 생명포럼

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조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논의 결과를 보면 생명권을 존중해서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개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현재는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 사유 중에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대부분 제외하는 데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서 우선 개정 가능한 부분부터 개정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李玲愛 議員 보건복지부가 2005년 용역사업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신중절 건수는 연간 34만 2433건, 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29.8명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조사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제보다 낙태 건수가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1994년 껄럽조사에 의하면 낙태 건수는 연간 약 15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신중절률은 미국 20.8명, 캐나다 15.2명, 호주 19.7명, 영국 17명, 일본 12.3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낙태 방지를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낙태 방지를 위한 것은 주로 홍보사업만 하고 있어서 홍보사업 예산 2억으로 주로 생명 존중과 낙태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방지를 위해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간 이후에 법 개정 문제를 지금 생명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고, 또 교과부에 지금 보건교육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과부와 협의해서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낙태 방지에 관한 교육을 거기 넣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낙태하고자 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중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지금 가지고 기재부 등과 협조하

고 있습니다.

○**李玲愛 議員**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낙태 방지 정책은 UCC 공모전, 지하철 및 개봉관 광고, 공청회, 토론회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 노력도 그중의 일환이고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 과정에 일부 넣는 방안도 지금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고 또 낙태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출산을 하려고 하는 임신부 중에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李玲愛 議員**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책정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2009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이에 반하여 금연사업 예산은 281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낙태 방지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낙태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죽이는 우리의 현실은 인구정책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낙태를 방지하려면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한 청소년을 위해서 10대 양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고 임신기간 중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해주어야 합니다. 미혼모가 된 학생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녀도 수혜자에 포함시켜 양육 지원과 어린이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를 방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충동,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섭식 장애, 아동 학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보다 심각한 사실은 낙태가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1996년에 채택한 인구증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玲愛 議員** 다음은 존엄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28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2월 11일 이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소위 존엄사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소위 존엄사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 묻습니다.

과연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서 네덜란드, 벨기에와 미국, 호주의 일부 주 등에서 법률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법률은 없더라도 판례 또는 의료 관련 지침 등의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입법화하는 것은 의료적인 판단 외에 고도의 생명 윤리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화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 제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李玲愛 議員**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윤리학적, 종교적, 의학계에서도 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퀴란 사건의 예를 들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퀴란이라는 젊은 여성이 1975년 파티 중에 술과 약을 섞어 먹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입원 초기부터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중 몇 달 후에는 지속적 식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딸이 죽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였으나 병원이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을 허용하여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었는데 그 이후에도 9년 정도 더 살다가 폐렴으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법제화할 때의 문제점은 이러한 애매한 기준을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의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불가피한 오진율을 생각하면 법제화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동의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동의가 연명치료 중단에 필수 요소라는 것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은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내린 자기결정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어디까지의 정보 제공이 충분한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아가서 환자가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나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졌을 때 대리 동의나 추정 동의 문제도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나 환자의 동의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존엄사 내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려면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영국의 경우는 의료비용이 국가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릅니다. 의학계에 의하면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임종 직전 1년 사이에 평균 3000만 원의 의료비용을 지불한다고 합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면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가난한 환자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포기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무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전제로 시작된 제도가 죽음을 선택할 의무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에 대한 차별화가 되어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더 이상의 보호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생명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호스피스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존엄사의 법제화보다는 호스피스 제도를 확산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을 위한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호스피스 지원 사업에는 30개 기관에 1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의 투자액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호스피스 사업의 중요성에 대단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기관은 현재 34개를 해서 18억을 하지만 지역 암센터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예산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암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玲愛 議員** 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성장동력 바이오산업

등도 생명을 외면하고 상업성에 치우치면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독소이며 파괴력입니다. 오늘날 경제 위기도 따지고 보면 물질 숭배와 탐욕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생명을 수호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영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운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출신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그렇게도 국민을 실망시켰던 우리 국회가 아직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막말과 고성, 걸리지 않는 저속한 언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본회의장에 쏟아 놓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릇 국가를 경영하는 일은 나무를 키우는 일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건대 지금 우리나라는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말하면서 자기 신념과 다른 모든 생각을 폭력이나 겁박으로 굴복시키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소통과 토론, 다수결에 의해서 통합을 이룰 것을 전제로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지형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력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연일 저질스런 행동과 패륜이 뒤덮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과 막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본래 예절과 신의, 충효가 생활의 중심 가치였던 높은 문화국가

였습니다. 3대가 같이 모여 살면서 질서 있고 단란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구촌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대하는 말씨와 행동도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소중한 가치를 잃고서 문명화되고 도시화되고 선진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발전이고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KBS TV 채널 중 1개를 아예 국민 교육용으로 전환시켜서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높은 가치, 한국인의 생활 윤리 또 위대한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에 대해서 국민교육을 시켜 갔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품격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였으면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묻겠습니다.

현재 국정 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총 예산은 1000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를 한 10배 정도 늘려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등 좋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국민정신 고양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민족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방송법 제4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전문 채널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EBS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국인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자라는 취지의 방송은 사실 양 방송사의 설립 목적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BBC라든가 NHK 같은 것을 보면 격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KBS가 이와 같은 훌륭한 방송사를 모델로 해서 좀더 발전성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국민 계몽을 위한 대국민 교육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서도 계승·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정부는 이러한 소중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가 방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금 예산을 10배 정도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공통요소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일생 동안 찾고자 노력한 앨버트 그레이에 의하면 성공의 공통분모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것이란 흔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위기니 하며 서두르는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 앞에 정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뭘까요? 본 의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대담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 양양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발 구조조정을 할 때 연구원부터 예산과 인력을 줄이는 우는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연구원만큼은 설혹 실패와 낭비와 중복이 다소 있다라도 그것으로 얻는 득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성 등 일류회사 CEO는 대부분 이공계 출신입니다. 중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이공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에는 이공계 출신 장관이 없습니까? 이공계 출신 장관의 임용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실 또 장관 임용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기획과 예산 배분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중간 간부 실·국·과장직에 과학기술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 후대를 위해 소중한 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이와 같은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장 패러다임

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이 중요할 때는 역시 노동이라든가 자본이 중요했습니다마는 질적 성장의 경우는 과학기술, 혁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인식을 해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고 있고 또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위에 과학기술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훌륭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공직자 채용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깊은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 현실은 황폐화되어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정작 잠을 자고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교육 혁신의 첫째는 평준화라는 잘못된 이념의 틀을 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논리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오로지 교사들만이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입니다.

인간은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지적능력이나 감성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개인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또 학교 간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애초부터 실패를 잉태하고 있었습시다.

정부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개혁사업을 펼쳐도 잘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이유도 평등주의 몸통에 불평등주의를 접목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역 및 학교 간 학력격차를 해소한다는 평준화의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았고 학력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과부가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실상을 좀더 정확히 알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4%인데 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10% 전후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학교가 평준화 체제하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는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25년 전, 35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준화를 통해서 학교시설이 많이 좋아진다는지 또는 교원 배치가 잘 되어 가지고 그렇지 못했던, 혜택을 못 받던 학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지 그런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평준화의 형식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개 학생들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준화보다 훨씬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우수한 학생들이 더 우수하게 되도록 만드는 데 이 평준화라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평준화에 전혀 못미치고 있는 학생들을 평준화의 잣대에서 보면 그냥 가려져서 그 학생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해 주신 미달 학생, 우리가 실시했던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미달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경우에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게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아주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급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생들을 잘 길러야 했는데 방치하고 평준화의 잣대로서 그냥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성운 의원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좀 뒤쳐

진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성공하려면 잘하는 학교에는 혜택을 주고 못하는 학교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온 부분은 뒤쳐진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2년 동안은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년 후부터는 그러한 학교들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잘하는 학교에도 거기에 합당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 이런 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현재 교사들은 동일호봉에는 동일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성과를 내어도 보상이 별로 따르지 않으니 굳이 열심히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 교사에게 인사상 이익을 주거나 또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더욱 차등화해서 우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사실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교육 발전에 공헌이 있는 교원들, 예를 들면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어디에서 입상을 했든지 또는 수업발표대회에서 입상을 했든지, 이런 교원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연구 점수도 주고 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등 지급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해 왔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차등 지급률을 한 30%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여금에서 우수한 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교육 혁신의 둘째는 교육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시장의 문을 꼭꼭 닫아걸고 있는 우리 현실은 교육 엑서더스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초중고생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초중고 조기 유학생 수가 1999년 183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2만 76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수지 적자가 98년에 불과 8억 불이던 것이 2007년에는 무려 50억 불에 달했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를 수출해서 번 이 돈을 교육수지 적자로 모두 날려 버리는 셈입니다.

싱가포르는 1980년부터 30년간 학교 부지 무상임차, 4년간 교수 연구비 50% 국고 지원 등 혜택을 주어서 MIT, 시카고대 등 세계 명문 대학을 유치했습니다. 자국 학생 모두에게 외국 유학과 같은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해서 2015년까지는 인구의 3%인 무려 15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학·MBA·의학 교육은 세계적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싱가포르와 같이 교육을 산업화할 충분한 잠재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교육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교육을 수출하는 적극적 교육 개방 정책을 펴갈 용의는 없으신지, 아시아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과 육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배우는 숫자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너무 적고, 이것이 참 불균형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장을 개방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의 좋은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러한 교육 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학이라든지 또는 의학이라든지 이러한 분야…… MBA도 그중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이런 분야에서 우리도 이것을 수출할 수 있으려면 교육 개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개방을 좀 과감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IT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개발이 지금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학교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아주 감탄할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로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외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이 좀 길어졌습니다.

○**백성운 의원** 괜찮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시아권 학생들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작년 말로 한 6만 4000명 정도의 아시아권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받아 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 주는데 일단 들어오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런 불편 때문에 모국에 여러 가지 불평을 해 댁니다. 그것이 험한증, 이런 것도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해서 이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저도 후속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백성운 의원**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원조, 소위 ODA라고 하는 원조가 자체 예산도 적지만 특히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다른 나라를 돕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국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아마도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파병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명분도 뚜렷한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나라 한국이 담당하겠다는 이런 선제적인 제안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가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KOICA 그리고 UNDP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에 ODA를 어떤 식으로 거기에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을 ODA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상 국가로 삼으려고 합니다.

○백성운 의원 교육 혁신의 셋째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무려 83.8%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설립이 자율화되면서 대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비해서 교육의 질은 확보하지 못한 채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취업을 못 하는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2021학년도에는 대입 정원 60만 명에 비해 고교 졸업생이 47만 명, 즉 13만 명 정도 초과해서 상당수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또 재정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관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대학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사회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학을 구조조정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은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모순적으로 역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이미 정원의 30%을 이상 못 채운 대학이 한 27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정원의 50% 혹은 40%도 못 채우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도 생기고 있고 또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국립대학 간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는 부실

사립대학의 경우에 인수 합병을 한다든지 또 공익법인으로 잔여재산을 출연 허용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선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가 되면 학령 인구가 턱없이 대학 인구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학의 많은 수가 거기에 적응해서, 순응해서 줄어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오늘날은 국민의 두뇌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뇌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이야말로 국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장관님, 적벽대전의 동남풍처럼 지금 학교에서 부는 열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당연히 게임이라는 열풍을 등에 업고 교육콘텐츠를 게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과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e-러닝 서비스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과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곳은 여수에 있는 백초초등학교라고 도서 벽지 학교입니다.

그런데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교과를 개발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정말 게임의 왕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골 학생들이 나가서 도 대항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대회를 하면 항상 1등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교실이 지금 현재 110개 정도 개발이 되어서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대폭 늘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 사이버에 연결해 가지고 교과에 관한 질문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선생님이 6만 명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생 회원 수도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콘텐츠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더 확대해 가지고 전 학생들이 이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에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성운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농업사회가 규제적 법체계, 산업사회는 관리적 법체계라 한다면 오늘의 지식두뇌사회에서는 육성적 법체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도 기술 육성의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영토전쟁이 아니라 분명 특허전쟁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전쟁은 분명히 기술 육성과 관련되는 본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은 그런 점에서 법의 전문성인 변호사와 기술의 전문성인 변리사가 특허전쟁인 특허소송에서 공동 대리를 하게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변호사의 단독 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문제가 결코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밥그릇 뺏기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통해서 글로벌사회에서 국제적인 특허소송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니까 변호사는 필수이고 변리사는 소송 당사자가 희망하면 변호사와 공동 대리하게 하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법률사무소든 특허소송에서 기술적 문제는 전적으로 변리사가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술 육성 법체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술 육성 차원에서 장관님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지식두뇌사회에서 규제와 관리 위주의 법체계보다는 육성의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특허 침해 소송은 이것이 민사소송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고 소송 수행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해서 변리사의 진출을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변호사의 전권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소송 대리 인정 여부는 소송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소송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서 한층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기본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하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인데 여기에 아마 앞으로도 특허 분야라든지 지적소유권 분야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능력으로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의 아주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의원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 예, 알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둘러 매진해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찌면 한가한 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이 대개 걸음을 재촉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 방향인지, 진정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근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백성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성진 의원님 소개로 해서 한미해병대친선협회 회장단 일행 마흔 분이 조금 전까지 방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일주일 후면 이제 MB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대학 서열화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 외국인학교, 특목고, 자사고 확대와 고교 서열화와 국제중 설립으로 초·중고 서열화 등 학교 서열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화, 학교 선택권, 학교 다양화 등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가며 학교 서열화라는 본질을 숨긴 채 국민과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학부모를 선택권과 다양화의 달콤한 언어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고교평준화와 대입 3불정책에 대한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MB 정부의 다양화와 선택권의 허구성 그리고 천박한 역사관을 지적하고, 10여 명의 해임·파면이라는 중징계 사태를 초래한 일제고사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일제고사 평가결과 공개로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교육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단위학교에게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거부권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원근거인 국가교육기회 균등보장법 제정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사이버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국립사이버대학 설립 제안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학부모들이 MB 정부에 원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해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MB 정부는 학교 다양화, 학교 선택권 등 달콤한 말로 국민과 학부모를 현혹시켜 고교평준화정책 보안을 넘어 고교평준화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존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국가발전에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동안에 고교평준화가 전인교육 여건조성이나 입시경쟁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었습니다마는 학교의 자율성의 확대라든가 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대입 3불정책은 포기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3불정책은 아시다시피 대학 3단계 완전자율화의 1·2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하면서 2012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분명하게 3불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분명하게’보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는 국무위원이니까 앞으로 질문하실 때 그분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께서는 교육관이 어떻습니까, 총리님의 교육관은?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인적 자원을 고도화해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력을 창조·조장시키는 이와 같은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대한민국 교육이 창의력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동안에 창의력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좀더 개선함으로써 창의력을……

○**김춘진 의원**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뭐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창의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취급하는 이와 같은 일명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 의원**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불리한 여건이 있으면 그 여건을 생각해서 형평에 맞게 교육하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준화 과정에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평가하고 좀더 개인의 자율 또 인센티브, 동인을 주는 이와 같은 교육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시점에 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공·사교육의 모든 교육비를 다 합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교육기술부장관이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김춘진 의원**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세계 최고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육비를 낼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그 등록금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00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국가에서 내는 돈보다 개인이 내는 돈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원인분석을 잘해서 그야말로 진단을 잘하고 처방이 잘 나와야 할 터인데 왜 이와 같은 사교육비가 높아져 가지고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원인을 잡아야 할 터인데 그것은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제도를 개혁을 하고 공교육제도를 더 개선한다고 그러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개혁입니다.

○**김춘진 의원**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사교육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잘 됐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분석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미리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과제물을 풀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가 어릴 때 공교육을 통해서 다 컸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사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적자원이 우리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그러면 공교육만 가지고도, 훌륭한 공교육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사교육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공교육이 부족하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교육이 철저하다고 그러면 사교육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이와 같은 교육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문제는 선행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배우고 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그것은 공교육이 만일 정말로 잘 된다고 그러면 선행교육도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춘진 의원** 바로 그게 학교서열화 때문입니다. 다 좋은 중학교 가고 싶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죠. 좋은 대학 가고 싶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은 자식에게 그렇게 교육을, 그러면 이등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가장 훌륭한 교육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경우에 사교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지 말고 부담이 적은 공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교육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가져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춘진 의원**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동의하시죠?

○**국무총리 한승수** 어떤 어려울 때입니까?

○**김춘진 의원**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자, 교육세마저 폐지하려고 그러죠?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폐지하는 것보다 대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대체가 만족하리만큼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교육세라든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목적세는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좀더 조세질서를 정리하는 과정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교육을 저해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썸 그 정확한 자료는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김춘진 의원** 이주호 차관께서 조사한 것이 30조가 넘습니다. GDP 대비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30조요? 그러면 GDP의 3~4% 되네요.

○**김춘진 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교육세로, 교육에 투자하는 게 지금 GDP의 1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이자 하는 겁니다.

○**김춘진 의원** 자, 그러면 경쟁원리로 가면 사교육이 없어집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경쟁원리로 가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시키면, 사교육이 어떻게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보다는 사교육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기여한 바가 여러 면에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율성을 저해한 면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초중고 학생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각종 시험대회에 나가면?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에 나온 학력 그것을 보면……

○**김춘진 의원** 아니, 국제 평가에서요.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에 나온 전국적인 그것을 보면 강원도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평가에서, 과학·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에서 상위권에 다 듭니다.

대학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학 평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최고 대학 중에 3개 대학밖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IMD 평가에 보면 60개국을 평가했는데 55위에요. 제일 꼴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썸, 우리나라가 대학 제도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제도도 그렇고 이런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이 없다고 그러면 경쟁력을 잃고, 잃게 되면 그것이 인재교육에 뒤지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인재교육이 뒤지면 경제발전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제도에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진 의원** 자, 창의력 있는 교육 시켜야 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창의력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교육보다도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숫자 외우는 교육 시켜야 됩니까? 암기식 교육. 그게 총리의 교육관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암기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창의력을 일으키는 교육입니까? 암기력하고 창의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김춘진 의원** 바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력 있는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럽니다. 사교육에 의존해서 암기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 평가에서 1·2·3·4등 하다가 대학만 들어오면 꼴찌를……

○국무총리 한승수 평준화를 한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암기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김춘진 의원 창의력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폐지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교육제도가 과거부터 암기 위주로 와 있기 때문에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교육이 이와 같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조장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되고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난 10년 동안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한국 학생들이 몇 %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김춘진 의원 반절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비리그에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 학생들보다는 미국 안에서 교육을 받고 간 재미동포들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자, 바로 비판의식이 없고 암기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나 미국 안에서 배운 우리 동포의 자녀들은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유학 간 학생들 말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에서 그런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비리그에. 그래서 그 수가 대표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3분 정책 폐지하겠습니까? 고교 등급화를 조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교육제도는 장기적인 이와 같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제도의 개혁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조금 시의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더 창의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전체 교육제도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3분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저보다도. 저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고대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을 사건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입학생을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대교협에 대학 업무를, 입학 업무를 이관해서 바로 생긴 것 아닙니까? 첫 번째에서 생긴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조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평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하루속히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마땅한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보고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교과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택권 다양화의 실체는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선택권 다양화의 실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선택권 다양화의 실체가 뭐냐고요?

○**김춘진 의원**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썽,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외국인학교 확대,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설치, 자사고 확대, 특목고 확대, 그래서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더 다양화시키고, 그것의 실체가 뭐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가 오전에도 그런 유사한 질문을 받았습시다만 평준화의 기조를 깨는 것이 아니고 평준화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자사고라든지 또는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특목고 등등 이런 것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더 우수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이번에 서울대학 입시 결과를 보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여기에 포함되는 학교가 20등 이내의 학교 몇 개나 포함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되느냐고요? 뭐, 정확히 숫자는 제가 계산을 못 합니다.

○**김춘진 의원** 일반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일반 고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학교 수로 봐서는 거의 10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김춘진 의원** 아니, 20등 이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20등 이내. 아, 많이 들어온 학교로 20등 이내, 그것은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제가 기억하기는 1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바로 여기에 속한 학교들이 세칭 SKY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들은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논 팔고 밭 팔고 해서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그런데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것은 MB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죽 오는 것을 이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만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춘진 의원** 문제는 100개를 설치하겠다는, 또 외국인학교도 확대하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또 국제중학교도 만들고, 또 자사고도 확대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이제……

○**김춘진 의원**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도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욱 확대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데 그것을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아동 가운데 아주 우수한 아동들이 많은데 그 아동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고 아주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많아지면 그런 현상이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춘진 의원** 전혀 반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건 이제 앞으로……

○**김춘진 의원**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 수 정원하고 전부 다 포함한 이 학교의 정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리고 우리가 대학 할 때, 저는 대학총장도 했습니다마는 서울대 학이라든지 고대·연대, SKY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학만을 가지고 모든 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도 이제 특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아까 200대 대학 중에도 들어가는 대학이 연대·고대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대학도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다양하게 봐야지 서울대학을 보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 문제는 여기 들어가면 보증수표입니다. SKY 대학 들어가는 데 보증수표지요. 부모가, 총리께서도 저보고 자녀 교육 그렇게 안 시키겠느냐고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맞습니다. 그

런데 자녀를 제대로 교육해서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인가는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자, 성적에 노이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청소년 상담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부모는 정말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학생들은 성적 순위 경쟁으로 정말 너무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정말 꿈을 잃은 패배자로 낙인을 찍으며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의 실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바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저희가 제일 뒤처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 학생들도 소위 평준화 잣대 위에서 보면 너무 아래에 처져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좀 올려 가지고 저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정책입니다.

○**김춘진 의원** 그것 보셨습니까, 발표한 것?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어떤 거요?

○**김춘진 의원**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미달되지 않은 학생들……

○**김춘진 의원** 미달된 학생도 제일 많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강남이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일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강남이.

○**김춘진 의원** 제일 적은 곳은 전북 임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김춘진 의원**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교육이…… 임실이 뭐 그렇게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 아, 거기는 바로 그 교육의 실체

가 작은 학교의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장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김춘진 의원** 작은 학교에서 그 학생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나 임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장수라든지 또 여러 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임실처럼 좋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농어촌 학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다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농어촌 학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학생이 다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농어촌 학생은, 농촌에 사는 학생들이 다니지요.

○**김춘진 의원** 조손가정이 20%에 달합니다. 다국적·다문화 가정이 40%에 이릅니다. 거기는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도시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또 부모가 갈라져서 불행을 겪은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촌으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 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런 학생이 다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요.

○**김춘진 의원** 지금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데가 농어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김춘진 의원** 이명박 정부의 다양화, 선택권…… 서민이 아닌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김춘진 의원** 돈이 없으니까요, 또 사교육 못시키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를 들어서 자율형 사립고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거기의 20% 학생은 바로 그렇게 경제 사정이 곤란해서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돈 많은 사람만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최소한도 20%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춘진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 부유층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서 사교육 받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졸업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앞으로 운영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느 외국어고등학교는 전혀 학원 수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아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세칭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실처럼 시골이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데서 엄청난 교육성과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을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특목고라는 곳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특목고도 아주 운영을 잘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김춘진 의원** 문제는 저학력의 그런 기초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입니다. 지금 그 통계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어떤 통계입니까?

○**김춘진 의원** 어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제일 많이 받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어느 학교에 다니

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특목고 학생입니까?

○**김춘진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제일 많이 사교육비에 투자합니다. 한 3배 정도 투자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특목고가 학비가 비싸니까 그 자체가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밤에 전부 다 학원 다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일반 학생들도 학원에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이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잘하는 학교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역시 제일 효과적인 것이 방과 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스로 학원이 아닌 방과 후 학교를 잘 운영하면 학생들이 사교육비에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 쪽을 아주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학생들을 12시까지 잡아 놓고 교육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방과 후 학교 12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 그런 학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뭐 그런 학교도 있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과 후 학교는 12시까지 가는 게 아니고 끝난 뒤에도 학원 같 시간에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김춘진 의원** 암기식으로 학교를 평가해서 서열을 매긴다면 학생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듭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암기교육에 의해서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4·19 데모'라고 하신 것 알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편향 논란, 사회과 교과과정 개정 시도 그것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역사관의 극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9 데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4·19 데모’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칭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한뉴스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에서 ‘4·19 데모’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데모’로 많이 불렀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데모’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바로 대한뉴스를 보여 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뭐 당연히 ‘4·19 혁명’이라고 부르지요.

○**김춘진 의원** ‘4·19 혁명’이라고 정부에서 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생혁명’이라고 부른 지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이 처음부터 ‘혁명’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 74년 이후입니다. 35년 동안입니다. 그런데도 ‘데모’라고 해서 저것 내보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그게 아니고 65년도에 나왔던 대한뉴스가 우연히 편집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춘진 의원** 그러면 이 편집에서 삭제해야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당연합니다.

○**김춘진 의원** 당연히 이것을 검열을 했어야지요. 이것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부 수거해서 폐기시켰습니다.

○**김춘진 의원** 책임을 누가 져요, ‘4·19 데모’라고 표현한 것?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아마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일제고사 거부해서 파면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일제고사는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일제고사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험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일제고사 때는 시험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죽 성적에 의해서 그야말로 학생들 줄 세우기를 했던 것이 일제고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취도 시험에서는 줄 세우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발표하는 것도 3개로 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줄 세우기하고 다릅니다.

○**김춘진 의원** 자, 학부모의 선택권을 알리면 파면 사유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우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지원해서 이 학생들을 올리기 위한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제고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제고사로 부르면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교육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교육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김춘진 의원**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생이요.

○**김춘진 의원** 맞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그러면 학부모에게 이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선택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안내서를 보내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 안 볼 자격을 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미국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면 우선 목적부터 다릅니다. ‘No Child Left Behind’라고 미국에서 정책 쓰는 것은 우리처럼 미달하는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든 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사실. 보고 그 학생의 성적 수준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알아내 가지고 그 학생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미달학생만 발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김춘진 의원** 미달학생을 뭐 하려고 발표해요? 그 사람들 지원하면 되지. 왜 공개를 합니까? 왜 학교 서열 매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생들 발표 안 합니다, 의원님.

○**김춘진 의원** 아니, 서열을 매기잖아요, 어느 학교 어떻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수학생도 발표 하지 않고 미달학생도 발표 안하고.

○**김춘진 의원** 어느 학교, 신문에 다 나왔습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교 발표 안 합니다, 우린. 지역을 발표합니다.

○**김춘진 의원** 예, 지역을 발표하지요. 또 학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역은 당연히 발표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학교에서 거부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교에서?

○**김춘진 의원** 교장선생님이 우리 성적은 공개 하지 않겠다 하면, 거부권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우선 학부모님들한테 알권리를 갖다가 그 학교에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정부로부터 그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도 됩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그 성적을 학교에서 우리는 공개를 원치 않는다 하면 부여하겠느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을 부여하기 힘듭니다.

○**김춘진 의원** 다음은 총리 나오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감사합니다.

○**김춘진 의원**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새만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든, 혁혁한 공사능력을 세계에 보여 준 아주 위대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이것이 앞으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김춘진 의원** 1호 방조제 높임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1호 방조제 뭐요?

○**김춘진 의원** 도로 높임 사업.

○**국무총리 한승수** 1호 방조제 도로 높임 사업

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춘진 의원께서 예결위 때도 질의를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긴 명품 방조제로서 바다가 조망될 수 있도록 도로 높임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로 높임 공사는 방조제 개통시기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가 공사방법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향후 개최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생각입니다.

○**김춘진 의원** 지금 방수제 공사 곧 들어가야 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방수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방조제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춘진 의원** 그런데 거기가 배가 800여 척이 있어요. 어항 만들어야 되고 이전해 줘야 되지요. 감척도.....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만금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고 총리실에 새만금기획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김춘진 의원** 금년 11월부터 당장에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춘진 의원** 배가 거기 800여 척이 고기 잡고 있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1000만 원 대 국제중설치, 특목고 확대, 자사고 확대 등 특권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으려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탈감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MB정부는 학교 다양화를 통한 학교 서열화보다는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 서열화를, 학교 선택권보다는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그리고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수준의 최소한의 교육지원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교육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국가 교육기회 균등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사이버 강국에 버금가는 국립 사이버대학을 만들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지역별 고른 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일행 10인이 방청하고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용 의원의 소개로 서울 강동구의 지역구민 62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석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한나라당 강동을 국회의원 윤석용입니다.

저는 작년 7월 이 자리에서 총리께 국민들의 민생대책을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난해 질문 때와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산층은 침몰하고 빈곤층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도 과거 정부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많이 피곤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팬찮습니다.

○윤석용 의원 건강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감사합니다.

○윤석용 의원 지금 서해안이나 휴전선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경제 위기가 가속되고 외국자본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경제나 후

은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특사 파견이나 적십자사를 이용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북한에 결핵이나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제약공장 추진, 병원 건설 지원이 있었고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대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윤석용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조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용 의원 ‘존경하는’ 말씀은 안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북한군의 키가 150cm 정도입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나 건강악화까지 회복하려면 통일 뒤 수백 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 중 1% 정도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배정해서 통일에 대비해야 됩니다. 혼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내 연구기관은 통일비용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라든가 재정 절감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간다든가 기금적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지난번 외교통일대정부질문 때도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남북협력기금에 배정하는 문제는 정부재정의 여건이나 국민합의 등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석용 의원 일이 터져서 확대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하는 정부가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윤석용 의원 작년에 정부는 독도 문제로 떠들

씩하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총리께서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독도 문제가 부상했을 때 총리가 대한민국총리로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을 했었고 또 지난 8월에 총리실에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설치해서 정부 내의 정부 정책 일종을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국민들은 독도 문제를 국토 수호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혹 일본의 극단주의자가 경비대가 없는 독도의 서도에 상륙을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독도에는 수비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도를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땀질식 대응만 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해병대 주둔,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등 효과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질문하신 독도의 날 제정이나 배타수역의 설정 같은 문제는 독도 영토관리 강화 필요성과 한일 간 외교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총리, 혹 백악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였던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분은 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를 나온 분으로 훌륭한 자격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한국보다 장애인 복지가 훨씬 잘된 미국에서도 대통령 직속인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복지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에서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난 2월 13일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시다라는 위원회 소속을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등한시 하거나 위원회의 기

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총리 산하에 있을 때도 회의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 장관한테 간다고 더 발전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전채희 장관은 훌륭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석용 의원** 또 한번 더 속아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가장 잘못된 복지정책 중 하나가 복지정책의 지방이양과 장애인 LPG 지원 폐지입니다.

2010년부터 LPG 지원을 전면 폐지한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LPG 차량의 뒤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제대로 실리지도 않습니다라는 LPG 지원은 장애인들이 가장 요망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LPG 지원을 계속해서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요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고, 특히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LPG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장애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은 계획대로 폐지하되, 이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연금제도,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 직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요망하는 것은 LPG 지원의 부활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파주 어린이집

이 교사들에게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줬더니 교사들이 읍내 어린이집에서 먼 지역 어린이집으로 옮긴 기사입니다.

보육교사들이 하루 12시간의 격무에 시달리지만 시간외근무수당, 담임수당, 특수교사수당이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수당은 월 90만 원 정도, 국공립은 한 1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우선이 보육제도인데도 대학원을 졸업해도 똑같이 열악한 처우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매년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힘센 기획재정부에 눌러 가지고 예산 확보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정말 총리님께 부탁할 건데 관계부처에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좀 지시를 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는 보육과 관련된 국가의 지원이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육예산을 전년 대비 2426억 원 증액해서 1조 710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05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증액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예산을 짜 나가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이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했다고 재정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원은 앞으로 좀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지금 학부형과 어린애는 있어도 교사는 없어진 것이 보육 현장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나오지 않아서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재래시장 상인이 자기 토지를 법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세입자가 되어 생계를 꾸려 가고 있지만 공동지분이라서 재개발 시 조합원 자격이 한 명뿐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인들이 공유지분을 쪼개지 않더라도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상가 등의 공유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너무 많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

우의 부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재래시장 상인의 경우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탕주의가 판치고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게임장과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도박산업 규모가 53조에 달합니다. 아마 이거 도박 공화국이라고 불려도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마, 경륜, 경정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장일을 동시에 묶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다 정부가 설치허가를 하고 한 합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합법적인 기관을 심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인해서 또 불법이 더 성행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지점이 많고, 끊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어서, 강원랜드뿐 아니라 경륜, 경정, 경마 그외에 사실 이 기관보다 지금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 이렇게 증설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외발매소가 전국에 18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도박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장외발매소는 줄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최근에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700곳을 폐쇄시켰는데도 여전히 도박사이트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핸드폰에도 광고가 많이 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법무부가 3만 5000건의 사형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했는데도 70% 이상이 경미한 처벌입니다.

이러한 단속은 왜 하며 처벌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일단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에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

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철저하게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단속도 미흡하지만 예방조치는 더더욱 미흡합니다.

25만 명의 동시접속을 기록했던 메이플스토리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가 있는데 어린이날에는 12시간 동안 경품을 주는 이벤트로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사행심리를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현실을 모르는 어머니들은 애들한테 돈 주면서 '너 PC방에서 놀다 와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즉시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학부형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번에 저희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용 의원** 학생들은 지금 전국 어디에 가도 시간만 있으면 도박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노출, 과몰입되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애들의 학습장애를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관계 부처와 서로 협의해서 사전 예방대책을 시급히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9시가 넘으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장관님 결단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셧다운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을 해서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저희 부처에서 게임산업을 진흥시킬 그런 책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하지 않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또는 체육, 기타 다른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안을 관계 부처와 열심히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단속을 안 하는 것도 방임이 될 수 있으니까 상시관리체제로 만들고 또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속히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아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이고 내년에는 한일병합 100주년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별다른 행사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이러한 행사를 남북한이 공동추진해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할 생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런 안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문화교류에 관련된 것은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통일부장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에 대한 정부행사도 행사지만 사실은 기타 저희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또는 연극 등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올해가 임정 수립, 4월 13일이 90년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 그 다음에 3·1절 행사, 기타 하여간 우리의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해가 올해, 내년에 많은 부분이 겹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특히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래 말 지키기 또 역사 공동연구 같은 것은 속히 추진해서 남북한이 이런 것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민족의 자긍심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고맙습니다.

○**윤석용 의원** 다음은 교과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야당 질문에 너무 당당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수렴하는 입장에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물론입니다.

○**윤석용 의원** 계층할당제는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선진제도입니다. 실제 공평한 교육기회 뿐만 아니라 빈곤탈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입니다.

신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계층할당제가 뭐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금년부터 정원 외의 특별전형제도인 기회균형선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그 두 계층에 대해서 정원의 9%까지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 학생이 전 학년도, 1·2·3·4학년 공히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또 소득 하위 2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하게 하고 국가근로장학생 숫자도 굉장히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40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만 7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윤석용 의원** 사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정부에서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사실 별반 없습니다. 이것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리고 지금 학자금 융자 이율이 너무 높다고 하는데 낮출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지금 한국장학재단이 생깁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생기면 그 장학재단에서 재단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이자율보다 한 2%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러면 몇 %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칠점 몇 %니까 그렇게 하면……

○**윤석용 의원** 7.3%에서 2% 낮추어 주면 한 5% 되네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석용 의원** 그것은 너무 높지 않아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자금이나 농어촌자금 같이 좀 저리로, 정말로 국가 장기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것은 재단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경우고요. 또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 경우에 이것을 조금 더 낮출 계획도, 한 1% 정도 더 낮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교육 불평등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투자를 확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처음 배출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윤석용 의원** 그런데 사교육, 고비용, 진로 불투명이 심각합니다. 졸업하는 데까지 한 1억 들고, 연 한 20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드는데 인하할 생각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 학비를 인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그것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아직 정착이 못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제도인지 이것을 내년도에 결정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로스쿨과 똑같이 부자들만 앞으로 의사되는 것 아니겠어요? 1억씩 들고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금 그 사람이 졸업을 해도 의사 10만 명 시대에서 나중에 생존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연구소라든지 병원으로 보내서 기초의학을 연구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그분들을 갖다가 대학 학사 출신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임상으로 내몰면, 그것은 사실 돈 낭비입니다. 이걸 적극 검토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감사합니다.

○**윤석용 의원** 복지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 8급 공무원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쥐야 될 보조금 26억을 떼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한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건 양천구청 직원이 3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점 자체가 체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공직사회에도 대단한 신뢰를 떨어뜨린 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즉각 현장에 조사단을 내보내서 구체적인 걸 조사해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타지 않고 바로 그 해당자의 계좌로 제3기관을 거쳐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용 의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돈만 대주고 지자체에서는 돈을 때먹든지 말든지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수습조의 돈이 지금 어디로 당긴 거야? 그러니까 밑바닥, 저소득층들은 너무 어렵고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이런 것은 체계적인 관리 체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또 신빈곤층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런데 추계되는 4억의 추경예산 확보도 중요합니까마는,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긴급 상황이라고 인식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걸 할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 지금은 2009년 2월이기 때문에 2009년 12월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을 당겨서 쓰면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비비는 물론이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어려울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일 상황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민생안전지원본부를 만들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다 만들어서 일일 상황실을 가동하면서까지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장관님,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마련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복지 사각에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면적인 통계조사를 한번, 실태조사

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비상한 실물경기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수급 빈곤층이 대단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이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서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아까도 잘 하신다고 칭찬했습니다마는 사실 차상위계층의 통계도,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기한을 한 6개월로 책정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현재는 4개월인데 6개월로 늦추려고 합니다.

○**윤석용 의원** 그러면 6개월 후에 그 수혜자에 대한 안전망 취약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의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편입한다든지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을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용 의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 위기가 언제쯤 해소되리라고 전망합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금 전체적인 전망은 적어도 금년 1년은 가리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1년 더 갈 겁니다마는 경제회복 시점과 긴급복지지원 하는 기간을 좀 일치시켜 가지고 지원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어쨌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총력적인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층 탈출이 참 어렵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더라

도, 일정 소득수준 이상을 벌더라도 수혜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해피론(happy loan)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 좀 검토해서 한 번 수급자 되면 평생을 수급해야 되고 또 한 번 수급을 받으면 평생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책적인 잣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모색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을 적정 생활로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간의 정부는 주로 보호하는 데 치우쳤기 때문에 솔직히 탈수급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산 형성을 하거나 특별하게 일할 경우에 앞으로 돈을 모아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을 현재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노인들니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습니다.

○윤석용 의원 그런데 전체 소요의 한 10%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 70세 이상 된 어른만 해드리던 것을 금년에는 65세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보면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지금 네 분의 의원님이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적용해 주는 것을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1조 이상의 돈이 들고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제상황하에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적용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보고할 계

획으로 내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노인들니 지원대상자를 경제가 어려울 때는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기초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지원할 생각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빨만큼 중요한 기관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들겠습니다.

○윤석용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 빈곤층 문제입니다. 빈곤의 결과는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 시도자 3명 중 1명은 건강 때문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에 대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노인 어른들이 자살하는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노령기의 질병으로 접어들 수 있는 때가 40대라고 보고 40대의 생애전환기 검진을 통해서 그때 성인병을 집중적으로 검진해서 대처를 하고, 특히 어른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치매에 대한 생애전환기 검진을 70세 때 하고 74세 때 두 번 해서 저소득층 어른들에게는 직접약을 사 드실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관계 부처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노인 자녀가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각지대는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65%가 치매나 뇌졸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노노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희가 노노가정은 금년 5월까지 재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노노가정은 약 84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이든지 의료급여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도 본인 부담률을 일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윤석용 의원 복지부가 정말 찾아가는 개인 맞춤형 복지로 좀 능동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힘 있는 우리 장관님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나머지 드릴 말씀이 많습시다만 그것

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감사합니다.

○**윤석용 의원** 준비한 것은 많습시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보다 정직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북한과의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향에서 대화와 교류를 하고 국회는 국민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집안에 불이 나면 우선 가족 모두가 나서서 불을 꺼야 되듯이 경제 위기 상황을 국가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에 평가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윤석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홍희덕 의원입니다.

고용대란이 닥쳐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일자리가 무려 1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당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있는 정부의 고용대책은 사실상 인턴만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턴만 몇만 개를 만들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고용대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용대란이 닥쳐오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오히려 깎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국민들에게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모든 국가들이 자동차산업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5만 명의 고용이 달린 쌍용자동차 문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고용대란은 명백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철학과 실정으로 인해 다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요인 때문도 아니며 국내의 경기 침체가 그 본질적인 원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실패와 무능한 고용정책이 400만 실업대란, 고용대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 고용동향 통계가 심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1월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취업자가 지금 228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비한 10만 3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고용상황이 심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홍희덕 의원님께서서는 이것이 우리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제 국내로 전염이 되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됐고 그것이 실업과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조속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사업의 조기 집행이라든가 녹색뉴딜정책이라든가 신성장동력산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곧 이명박 정부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때쯤 일자리 몇 개쯤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상하는 일자리 창출 숫자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약으로 300만 개라고 내놨습시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

내 경제도 고유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체 증세가 없었고 특히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국제 금융위기도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됐었습니다마는 현 정부가 작년 이맘때 출범한 이후에 유례없는 초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가 내세웠던 일자리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로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생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저소득층이고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미 수립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유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경 편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결국은 후보 시절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불가능하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국무위원님들의 자녀들 중에도 청년실업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청년실업 대책이 바로 인턴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인턴제가 정말로 청년실업 해소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인턴제도는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실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업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부로서는 글로벌리더 양성이라든가 WEST 같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총리께서는,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고용의 어려움이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올해 안에 끝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증현 신임 재정부장관이 올해 경제성장을 -2%로 얘기를 했고 IMF는 그것보다 더 낮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성장률이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한해 내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희덕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하면 고용 창출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지금도 계속 경제의 침체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참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세계의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되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저는 지금의 경제 위기와 고용 대란이 최소한 2~3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그 청년 인턴들을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리께서?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만여 명 정도입니다. 사실은 많지도 않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실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 3만 2000명 증가한 32만 명이기 때문에 인턴만 가지고 이것으로써 청년 실업을 흡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여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로서는 하여간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를 줄여 가지고 플러스 성장으로 가다 보면 공공 부문에 와 있는 이와 같은 인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다시 2년짜리 인턴으로 되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면. 이렇게 되면 2년짜리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을 직접 공공 부문에 사용해서, 채용해서 일자리를 좀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정부 부문의 인턴 말고도 공공 부문에도 공사라든가 공기업에서 인턴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금융 부분, 금융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는 이것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장기적으로 경제기반을 탄탄히 해서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시킨다든가 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하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홍희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용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나누이기 때문에 이쪽에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어려움을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이와 관련해서 가진 자들의 감세 문제가 또다시 대두가 되는데요. 예측을 잘못하고 너무 서둘러서 부자들에게 감세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세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감세를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 세원을 창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는 얼마 전 보고서에서 감세가 오히려 경기 진작에, 세출 증대가 더 효과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세하는 것이 반드시 일자리에 영향을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경기 진작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세가 반드시 있는 자들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경기 진작, 소위 피스컬 스티물러스(fiscal stimulus)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감세와 세출 증대가 같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7870억 달러 가운데도 거의 2000억 달러 이상이 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수

를 진작하는, 그래서 내수 진작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저희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빈부격차의 입장에 의해서 보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비정규직 인턴으로만 내몰아서는 결코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홍희덕 의원** 이런 뽕빵식 정책이 아닌 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장관님께서 조선히 호텔에서 있었던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홍희덕 의원**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동부장관 이영희** 기업이 지불할 수 없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상 또 어려운 개념 아니겠습니까.

○**홍희덕 의원**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노동용어 사전에 이 최저임금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좀 인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헌법 제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먼저 고려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수준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 놓고 장관께서는 왜 기업의 지불능력이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전제로 하고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3만 원 또 40시간이 적용 안 되는 데는 9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근로활동을 통해서 받게 될 때는 한 20% 여러 가지 수당 더해서 더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의……

○**홍희덕 의원** 장관님, 잠깐만요. 최저임금을 지금 개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또……

○**노동부장관 이영희** 개악이 아닙니다.

○**홍희덕 의원** 아닙니다. 지금 개악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홍희덕 의원** 잠깐만요. 지금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의 경우에 보사부에서 나온 최저 생계비가 10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3만 원이 아닌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3인 가족의 경우에…… 4인 가족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홍희덕 의원** 어쨌든 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그래서 우리 장관님 노동부장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의원** 아무리, 이 정부가 친기업 정부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강부자 정권, 고소영 정권, 재벌만을 위하는 정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각 부처는 부처로서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의원** 장관께서는 노동부장관입니다. 적어도 강부자, 고소영 정부 안에서 노동부만큼이라도 기업 편을 들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역할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클 수도 있고 국민들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실제로 국민들의 최저 생계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장 방식을 최저임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다른 사회보장적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세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제 63만 가구가 될 겁니다. 4인 가족의 경우에 연간 소득이 1700만 원이 안 될 경우 최고 12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이제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당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칠 때에는 국가가 그것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는 근로자가 한 208만 명 되는데 87%가 아주 영세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영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장적 책임을 저라하는 것은 국가가 무책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홍희덕 의원** 장관님,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87%에 달하는 영세 사업장에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컨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지금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한계 기업, 우리의 경우에 아주 대기업이 있고 영세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이 99, 8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의 85%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대체로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희덕 의원** 장관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장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경제인들 연찬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나

가셔서 이런 말씀들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그야말로 취약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장관의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제가……

○홍희덕 의원 그리고 저는 늘상 주장하지만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고용대란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깎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심보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벼룩의 간을 빼 먹어야 할 정도로 궁핍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홍희덕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깎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희덕 의원 장관님, 그러면 2007년도하고—제작년이지요—2008년도 고용보험기금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작년의 경우에는 5600…… 5700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리고 제작년의 경우에는 한 5700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홍희덕 의원 지금 몇 년째 보험기금이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맞네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요인이 좀 다릅니다.

○홍희덕 의원 올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적자액은 또 얼마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올해 우리가 이미 한 1조 정도의 당기 적자를 전제로 하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자 규모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희덕 의원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너무 커서 기금 운용에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희덕 의원 사실 고용보험기금은 기업과 노동자들의 돈 아닙니까? 노동부가 기업과 노동자

들의 돈을 쌓아 놓고 안심할 뿐 정작 노동부 예산은 고용안정대책에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한 930만 정도 됩니다.

○홍희덕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또 몇 퍼센트나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원래 비정규직도 다 가입 대상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가입 대상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주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서는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한 50%밖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홍희덕 의원 그것도 못 미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9% 정도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대부분의 청년실업자들도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요? 현재 노동부는 대졸 신규 실업자와 같은 청년실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 같은 것은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청년실업자는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바로 고용보험에 적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실제로 완전 적용은 하지 않지만 미래의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청년 구직 계층의 취업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지금 노동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의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홍희덕 의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대체로 우리나라 자영업주가 전체로는 한 500만이 더 넘습니다. 540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가입 대상 규모로 볼 때는 자영자 한 224만 명, 그리고 5인 미만 영세 고용주 한 104만 이래서 300만 조금 넘는 숫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어차피 노동부도 고용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범위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홍희덕 의원 그래서 과감하게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에 돈을 출연을 해서 적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저희들이 아까,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그것이 발견될 경우에 체납한 보험료를 다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우리가 덜기 위해서 지난번에 특별법도 제정을 해서 기한 면제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자진해서 사업주들이 가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저는 현재 4대 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고용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건강보험제도 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해서 전체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장관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고용보험제도가 취약한 하나의 보험제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적자재정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적립금이, 현재 금년도에 5조 4000억 정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립금이 한 8조 2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건전성은 적립금 규모가 지출 규모보다도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1.5배에서 한 2배, 그다음에 고용안정사업은 1배에서 1.5배 정도로 적립하고 있으면 건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더 지출요인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화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이 지출하고 또 경기가 좋을 때 저축하고 하는 그런 경기 조절용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아주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의원** 하여튼 건전하게 해서 실업대란이 지금 오고 있는데 실업자들에게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희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용과 일자리가 복지이고 바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인권이고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고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장 불안정한 고용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합니다. 실업대란과 신빈곤층을 이야기하면서도 최저임금을 깎고 청년들을 비정규직 인턴으로 내몰아서 나쁜 일자리, 나쁜 고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쁜 고용과 일자리로 이번 경제 위기만 대충 넘기고 또다시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재벌들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용과 일자리 문제는 전 국민적 문제입니다. 의료·주거·교육의 문제만큼이나 전 국민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93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 1600만 명의 60%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60만 명, 그냥 쉬었다고 하는 사람 170만,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약 2600만 명의 국민들이 고용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입어야 할 인구 2600만 명 중에서 약 36% 정도밖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고용보험도 전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전 국민 고용보험대책을 촉구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해서 힘차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홍희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원진 의원님 소개로 해서 지역구민이신 대구 달서병의 주민 서튼아홉 분이와 계십니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의 박민식 의원

님 소개로 지역구민들이 와 계시고요, 서울 마포갑의 지역구민, 강승규 의원님 소개로 많이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의원 이윤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편차 배치 문제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파행 문제, 희망복지 129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 또 북한산 국립공원의 규제완화 문제 또 북한산을 서울의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문제 그리고 100만의 다문화가정의 복지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교육간담회를 해 보면, 공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들은 학교 발전보다는 좋은 학원을 하나 유치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시각이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1년에 사교육에 들인 비용은 총 20조 4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 영어를 배우는 데에 약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제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현재 전국의 초중고 1만 1120개 학교 중의 약 37.8%에 달하는 4200개 학교에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보조교사 한 사람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1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니까? 또 교사 한 사람이 1800명의 학생을 담당해서 어떻게 우리 영어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원어민강사를 영어보조교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전에 시작됐습니다. 1995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뒤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 제도가 대폭 축소돼서 지지부진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와서 다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아마 작년도 전반기 통계일 것 같습니다.

○정양석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데 작년도 후반기까지 합하면 그 1년 동안에 지난 여러 해 동안 한 것의 거의 2배에 필적하는 그런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하로 나누면 하까지 다 합해서 지금은 한 1368명에 1명꼴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원어민강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알겠습니다. 1300명당 1명꼴로 원어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아까 1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줄었습니다.

○정양석 의원 제가 교육부에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8년 4월 현재 통계만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그런데 배치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치 비율이 관련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인천·경기는 배치 비율이 67%에서 55%까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경상북도·전북은 31%에서 15.3%로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내에서도 지자체 간의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교당 1.5명, 자립도가 낮은 강북구는 학교당 0.8명.

또 최근에 발표한 영어학업성취도평가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서초구는 영어학업성취도가 95.1%에 비해서 강북구는 79.4%로 이렇게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자체 간의 이런 소득의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바로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교육청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어민 숫자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동시에 원어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대도시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에 정부에서는 원어민 배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제도가 있습니다. 소위 TaLK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를 계속 확대해 가지고……

이 TaLK제도는 주로 미국 같으면 미국 교포 학생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런 건데 그런 제도를 조금 늘려서 그렇게 부족한 데 이렇게 채우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외면하고 영어 사교육 시장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이고 시원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아울러서 사립학교 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조장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대 등 4개 대학의 임시이사 임기가 작년 6월 만료되었고 또 작년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마는, 아직 공백 상태입니다.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필요하면 장관께서 책임지는 그런 사학법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요, 저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도 말에 설치되고…… 아니, 재작년도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다 그렇게 대법원, 국회 또 대통령 이렇게 해서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 가운데……

○정양석 의원 장관님, 제가 법적인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법이라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상태를 법에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책을 여쭙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정양석 의원 계속해서, 전채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채희 예, 반갑습니다.

○정양석 의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좀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김 양의 어머니는 작년 여름에 식당에서 일자리가 끊겨서 한 달에 오륙십만 원 벌이가 안되니까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만, 교회 신도들이 뺑뺑이 장사라도 해 보라면서 기증해 준 10년 된 봉고차 때문에 수급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편지를 받고 ‘이런 가정은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결국 생계비도 받고 일자리도 받았고 그다음에 봉고차는 팔아서 기초생활수급

자가 되었습니다. 69만 원씩 받게 되었고 또 임대아파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쩐지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에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게 다 편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언급한 이런 사례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 것을 보면 대통령이 공약하신 희망복지 129센터가 가동이 잘 안 되었거나 홍보가 잘 안 되었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출마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에 산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고, 또 사각지대와 중복 수급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전달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그 공약으로 내거신 희망복지 129콜센터는 그동안에 연구를 거쳐서 금년에 10개 지역을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와 별개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할 것 없이 직접 위기 가구를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민생안정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 맞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나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2007년 8조에서 2009년 13조까지 약 2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는 전국 1만 명으로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강북구에도 49명이 한 사람당 6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바뀌어도 동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들밖에 없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 전달 체계가 바뀌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깔때기 현상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동사무소에 있는 두 사람이 많은 사회복지 문제를 전담하게 되고 또 사회

복지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과거에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구두 굵이 닳아질 정도로 지역을 누볐는데 요즘은 찾아오는 민원인을 만나서 상담하기에도 바빠 가지고 구두 굵이 닳을 새가 없다, 그리고 복지부라든가 다른 정부의 모든 부처가 복지대책을 세우지만 그게 동사무소에 배치된 2명의 복지공무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은 늘어나지만 결국은 업무가 폭주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2만 2230명입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직으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1만 128명이고……

○정양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행정직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만 210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이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또 사회복지직이 승진이 잘 안 됩니다.

○정양석 의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래서 앞으로 승진 기회도 늘려 주는 문제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복지 전달 체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복과 부정 수급을 막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산 조사와 소득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일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돈을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컴퓨터로 전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가지고 중앙에서 거의 한 팔구십%를 자동으로 조사하고 일선에서 한 10%만 조사하게 되면 업무가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복지 전달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사업별로, 각 과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과나 그 사업은 타당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받고……

○정양석 의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력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복지가 뭐고 능력이 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달해야 하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개인별로, 가구별로 완전한 자산·소득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밑으로 깔아서 일선의 조사 부담을 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찾아내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주지 않고 지침만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시키고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도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이라도 인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선 시군구에서 쓰는 행정인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전부 이 업무를 보조하는 요원으로 읍면동에 한 명씩 지금 저희들이 추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시군구에다가 한 5, 6명씩 추가 배치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양석 의원 좋은 중앙의 복지대책이 일선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이어서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 그동안에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국립공원 지역 중에서 64.72km²를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의원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국립공원 설정 지정 이전부터 자연부락으로 혹은 집단 지역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한산 국립

공원 지역에는 이번에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동일한 조건인 지역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 강북구 우이동 유원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국립공원 경계 내에 노란 선으로 이미 마을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우이동 봉황각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유동 빨래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강북구뿐만이 아닙니다.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둘러싸고 있는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5개 구 12개 지역에는 이번에 해제될 예정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이 설정되기 전부터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약 75만m²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환경 규제로 인해서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고치고 내 땅에 농사도 못 지었습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5층 20m밖에 지을 수 없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들 지역,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지역, 특히 수도권, 서울에 맞닿아 있는 도시화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강북 성북 종로 은평 도봉 등 제가 방금 이야기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가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고 국립공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지극한 사랑과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불편과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의 의견을 고루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방침은 아무래도 음식·숙박업소 등 주민들의 경제활동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예전부터 익히 살아오던 곳 등에 대해서까지 강압적으로, 이른바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처음 공무원들이 선을 그어서 포함시켰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등의 참

여에 의한 생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보다 많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공원위원회가 기왕에 제도적으로 존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의 심사·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양석 의원 국립공원을 우리 국민 모두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근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진정으로 국립공원을 보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그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립공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다만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님 질문 말씀에 답변을 올리면서 꼭 부언하고 싶은 말씀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환경적 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추가로 국립공원에 포함됨으로써 총량적으로는 국립공원을 계속 줄여 먹는 단책을 택하지 않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현명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이번에 규제완화로 인해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거리가 2km에서 5km로 늘어났습니다. 장관께서도 지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모든 공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이름으로 케이블카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 환경부로서는 거기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망과 또 지역 전문가들이 판단한 적정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케이블카 문제는 현재 국립공원을 분석해 볼 경우에 등산객들이 집단적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케이블카보다 환경에 훨씬 해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산림 등 국립공원 자원

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케이블카를 선택할 수 있다면 또 한편의 케이블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함께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토애를 함양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역 실정에서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사방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립공원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또는 현재보다도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국립공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히 그리고 현명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개선대책으로 40년간 통제되었던 우이령길을 금년 5월부터 일반에게 개방한다고 이렇게 발표 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정양석 의원 장관님, 혹시 우이령길 가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의원 저도 다녀왔는데 총연장 6.8km로 북한산과 도봉산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 좋은 곳에 과거 김신조 사건의 좋지 않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전망 좋은 곳의 환경을 해치면서 경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경찰 검문소와 군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당장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이령길을 일반에게 공개하시면서 이것을 이전하자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예산 소요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의원님께서 그런 강한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뜻을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원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내면서 저희들이 자동차 등 기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단계여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그 일환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저는 기관 이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정양석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산성이 지금 복원 단계에 있습니다. 북한산성은 총 12.7km인데 현재 약 24%가 복원되어 있고, 2010년까지 약 30% 복원될 예정이고, 또 서울과 경기도로 나뉘어서 복원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의원 어떻습니까? 장관님, 북한산성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산성은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와 경기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기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저희 문화재청에 산성 복원에 관련된 안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국립공원이라고 이렇게 이미 기네스북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의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관광 명소에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북한산을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구상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관광 부분은 작년 말부터 해서, 물론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계임하고 더불어서 유일하게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교

통·숙박·쇼핑·공연 그 외에 이런 역사 문화유적까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올 1년 내내 저희들이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문제를 따로 떼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시다라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내국인이 지금 1년에 한 440만 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해외관광객들도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부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양석 의원 북한산을 서울의 관광 랜드마크로 개발함에 있어서 아까 환경부장관과 논의한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그런 종합관광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양석 의원 김경한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115만 명의 외국인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표에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도 이제 12만에 접어들었고 강북구에도 약 1000명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도 이제 2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한국에 시집 온 10만 명의 결혼이민여성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가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가사노동, 또 생계를 위한 노동, 육아의 부담에다가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이 한국말을 배우지를 못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국적자들의 자녀들까지 합하면 정말, 우리 학교에서도 방치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정말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내에는 1국에 불과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0명이 110만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약 30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감

당이 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국가가 아니고 외국인을 같이 보듬어 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다문화가족들은 우리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과 똑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부처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1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본부의 숫자만을 말씀하시지 않나 싶는데 전국에 36개 사무소가 있고 여기에 직원이 1600여 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외국인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인원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인원이 충분한 인원은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계속 증원을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의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보니까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가, 또 주민행정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결혼이민자여성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말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장관님께서 국무총리와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경한** 그 문제도 진작에 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업무를 관장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처들과 어떻게 이것을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양석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행정인구에 산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개편과 인력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정권을 쥐 가면서까지 우리 정부는 대처하

고 있는데 행정인구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정창섭** 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산정 시에 등록 외국인 수를 감안해서 그 필요인력 수요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도 등록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로 반영을 해서, 금년의 경우 한 210억 정도를 재정수요로 감안해서 교부세에 산정을 하고 그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석 의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문희상** 정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석호 의원 소개로 경북 봉화군 지역구민 스물네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5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썩썩 얼어붙은 겨울공화국, 부자에게 한없이 퍼주고 서민에게 한없이 비정한 재벌공화국, 가짜 녹색 옷을 입고 온 국토를 파헤치는 토목공화국,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속도전으로 몰아붙이는 거꾸로공화국, 거짓말·거짓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어제 총리께서 경찰청장 인사청문 준비팀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직원들로부터 받았다고 하셨죠?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상희 의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죠?

○**국무총리 한승수**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 인사

청문을 요청한 바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청문팀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 인사청문 요청에 대비해서 일부 인력이 자료 수집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있지만 인사발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팀을 만든 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어제 돌아가셔서?

○**국무총리 한승수** 뭐에 대해서요?

○**김상희 의원** 지금 허위보고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어떤 것이 허위보고입니까?

○**김상희 의원** 처음에 준비팀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인사청문팀은 구성한 바 없다고 받았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면 또다시 허위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김상희 의원** 총리님, 처음에 허위보고받으시고 어제 가서 또다시 허위보고받으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아시다시피 2006년 1월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에 의하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후보자에 적용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행동지침을 보더라도 별도의 인사청문팀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팀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김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총리님 말씀은 공식적인 팀이 있을 수 없는데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공식적으로 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은 총리께 허위보고했습니다. 다시 경위 파악하셨는데 다시 허위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허위보고가 아니고요……

○**김상희 의원** 왜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공식적으로는……

○**김상희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가서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팀이라는 게 조직표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비공식적인 준비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팀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김상희 의원**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을 입수해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경무관을 단장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12일에 해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께서는 전부 다 허위보고받고 계신 겁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허위보고라기보다는……

○**김상희 의원** 총리께서 이런 취급 받으셔도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공식적인 인사청문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비공식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김상희 의원**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가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공식이라고 하면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김상희 의원**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거야 비공식적으로 팀을 만드는 것은 규정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보고받기에는……

○**김상희 의원** 총리님, 참 딱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청와대는 일개 행정관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지시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은 규정에도 없는 인사청문 준비팀을 이렇게 경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만들고 총리한테는 거짓보고하고 그리고 총리께서는 대정부질문에 와서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런데 그 청문팀은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 됐습니다, 총리님! 제가 총리님으로부터 더 이상 들을 답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님께서 자존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총리님은 대한민국의 총리입니다. 이렇게 총리님을 무시하고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용산참사를 놓고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경찰이 계속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백해졌습니다. 용산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제, 반드시 도입해서 국민들께 낱알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총리께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녹색성장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지속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예가 깊으신 김상희 의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환경 간에 대체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통해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당면한 문제인 기후변화도 아울러서 풀어가려고 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이와 같은 것이 녹색성장이고 정부로서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5일에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김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뒤에 이것에 근거해서 녹색뉴딜 정책을 얼마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속가능발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속발전하고의 차이라기보다는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지속발전 문제가 얘기될 때는 기후변화까지가 나오지 않았었지만 최근에는 유엔에서도 그렇고 기후변화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녹색성장은 더 광의의 이와 같은 지속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철학을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한번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지요.

○**김상희 의원** 예,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은 경제·환경에 사회정의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 유엔에서 채택하고 각 정부에 권고하는 발전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안에는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축소·왜곡시키고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유엔 회의에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현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철학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과 관련된 내용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 녹색성장에 대해서 유엔하고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유엔 반기문 총장과 전 미국 부통령 고어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서 바로 유엔이 지향하는 녹색성장에 대한 항목을 길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김상희 의원** 총리님, 공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에너지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석유 등 이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또 원자력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중장기 에너지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정은 2030년 에너지 수요 목표는 국가 에너지 소비를 연평균 1.1%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목표인데 이것은 과거 에너지 소비 증가율 4.4%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야심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틀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지금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우리나라가 2030년 에너지 수요가 28%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색성장입니까?

석유 소비량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김상희 의원** 석유소비량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2020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놓아두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 그야말로 그냥 놓아두면 그렇게 늘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 정부 계획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가만히 계세요.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서 가능한 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상희 의원** 에너지 수요 28%, 그리고 석유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 목표가 3억 t, 300백만 toe입니다.

○**김상희 의원** 도표 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하시고 나오십시오. 녹색성장 총책을 총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 친환경 녹색산업입니까?

대답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원자력은 2차대전 이후에 원자탄하고 이렇게 혼돈되는 바람에 평화적인 원자력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원자력의 안전도가 완전히 보정이 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원자력을 가장 화석연료를 덜 쓰는 청정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1기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도 92년에 새로운 1000MW OPR을 개발을 했고 2002년에는 1400MW를 개발해서 세계에서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와 같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참 걱정됩니다.

지금 유엔 EP에서 녹색경제를 위해서 2008년도에 제안한 정책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좀 봐 주십시오.

거기 8항,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하신 말씀은 다 틀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녹색성장기본법 46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자력산업 육성입니다.

총리, 2030년 우리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자력 발전 목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몇 년도예요?

○**김상희 의원** 2030년이에요.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우리가 20기의 원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6기를 지금 짓고 있고 2기를 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기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1기를 더 지으면 2030년경이 되면 아마 전체 전기 공급량의 60% 이상이 원자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여 기를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36%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량에서의 비율을 59%로 늘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반 환경적이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원자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현재 이 정부의 녹색성장입니다.

이게 어디 녹색성장입니까? 고탄소 회색 성장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만큼 앞서가는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는 지금 70%가 원자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공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공부하겠지만……

○**김상희 의원** 녹색성장 하려면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 녹색 뉴딜사업 50조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그 가운데에서, 아시다시피 녹색 뉴딜정책은……

○**김상희 의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3조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가만히 계세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김상희 의원** 토목건설업에 32조입니다. 10%입니다. 이라고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고탄소 시멘트 성장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어제도 경제 질문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을 위한 소위 녹색기술, 혹은 기술 융합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서 앞으로 2030년까지 정부로서는 R&D에 100조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 10조가 정부 예산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 총리님, 100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숫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정된 예산 중에서 3조, 건설 투자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녹색성장은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환경 보전도 중요한 한 축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입니다.

○**김상희 의원**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골프장 입지 규제완화, 정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가 불필요하게 규제가 되어 있던 부분은 풀어서 민간 부분에 이와 같은……

○**김상희 의원** 총리님, 가서 공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아, 저도 공부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얘기 좀 들으세요.

○**김상희 의원** 지금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있는지, 필요한 규제를 풀고 있는지……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들으셔야만 될 것 아닙니까? 듣지 않고 얘기를 하세요.

○**김상희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김상희 의원** 정신 차리십시오. 다른 데들은 진정한 녹색 뉴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희 의원**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 한승수**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희 의원** 가짜 녹색 뉴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녹색 뉴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김상희 의원** 4대강 정비 사업 말씀드리겠습니

다.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가 녹색 뉴딜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김상희 의원** 아, 진짜……

4대강 정비 사업의 주된 목표가 홍수 예방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홍수 예방 이외에도 생태나 문화나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국토 재탄생 사업입니다.

○**김상희 의원** 주된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국가 하천 정비율 96.6%로 정비 완료 단계입니다. 때문에 홍수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이나 강원, 영남 내륙, 경기 북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저것 봐 주십시오.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니까 홍수……

○**김상희 의원** 그다음에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홍수 예방 말고도……

○**김상희 의원** 다시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상희 의원** 다시 봐 주십시오. 주된 목표 아닙니까?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 규모나 주요 사업에서,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 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는 운하를 위한 사업 예산의, 87%가 동일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대운하 아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영산강 유역은 나주 영산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영산강을 운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낙동강 문제인데 낙동강 사업은 지금 안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본래 운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상주 위의 낙동강 삼강재에서 문경으

로 해서 충주로 넘어가는 물길이 있는데 거기서 56km 북쪽인 낙동강 상류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믿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면 대운하 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대운하는 지금 자꾸 4대강 살리기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살리기입니다. 믿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4대강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 믿습니다, 총리님을.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대운하, 정부에서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운하는 작년 6월에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질문을 계속하실 이유가 뭐니까?

○**김상희 의원**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이미 작년에도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예결위에서 저도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반복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희 의원**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도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대운하는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이 사회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희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대운하 합니까, 안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4대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은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상희 의원** 대운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살리기일 뿐입니다. 안동은 운하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56km나 그쪽에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님, 국회의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미 이 문제는 작년에……

○**김상희 의원** 지금 몇 차례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대통령께서 6월에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왜 자꾸 물어보세요?

○**김상희 의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변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 부분 답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작년 6월 19일에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상희 의원** 다시 묻는 겁니다. 답변 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일 뿐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을 사실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고, 환경이나 또 지속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문제는……

○**김상희 의원** 저도 총리님 존경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도 총리께서 그냥 얘기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 질문 때도 답변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이것 답변한 것을 알면서 왜 질문하는지 몰라서 제가 답변 안 했는데……

○**김상희 의원** 그러면 안 하겠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시 자꾸 왜 반복을 하라고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 총리님 정말 딱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사회에 일자리 나누기가 가장 중요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상희 의원** 기업과 그리고 노동자, 국가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되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상희 의원 국민의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상희 의원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노사정위원회…… 국민의 정부 때도 아마 노사정위원회에 민노총이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상희 의원 노사정위원회는 외환위기 시절 수십 차례의 대화와 타협, 물밑 접촉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비정규직보호법, 2001년도부터 논의 시작해서 6년 만에 이룬 사회적 합의입니다. 법 개정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역시 대화와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고 고통 속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나누기에서도,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서도 서로 침예하게 맞서고 정부는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노사정위에서 제기한 의제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심층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이라든가 정책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법은 최근의 경제 위기와 짧은 고용 기간이, 2년입니다, 맞물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자리가 지금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입니다.

기업도 원하고 근로자도 원하는데 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정하면 우리 고용 문제 해결되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에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나 취업

기회 축소 등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나누고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비정규직 7월 100만 대란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최대 2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비정규직 2년에서 4년 연장한다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낮춘다고 그래서 일자리 늘지 않습니다.

총리님 공부하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비정규직은 지금 7월이 되면 약 3만 8000명 정도, 딱 7월에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조치가 없으면 자리를 떠나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희 의원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아까 역할했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역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출범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김상희 의원 누가 참여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거기에는 한국노총, 경총, 시민단체 또 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핵심 시민단체, 노동계 불참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김상희 의원 그런데 노사민정 회의가 실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노동합의문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일 만에 노사정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그 합의문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노사정이라든가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노동부장관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이것은 노동부장관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챙기고 계시어야지 이게 어찌 노동부장관 사안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도 챙기고 있지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김상희 의원** 사회적 합의 부분은 총리님이 챙겨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것의 운영에 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더 담당장관으로서 알고 있는데……

○**김상희 의원** 정말 한심하십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사실 국무위원들이 여러 분이 나와 있는데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는 안 하고 총리에게만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일자리가 어떤 상황인데 총리가 이 부분을 노동부장관 사안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단 20일 만에 노사정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23일을 기다리셔 가지고 결과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김상희 의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23일 결과 나온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주요 시민단체, 노동계 불참하고 있는데 들러리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 가지고 밀어붙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속도전 가지고 국민통합, 사회적 대타협 불가능합니다. 인식 전환과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 갈 겁니다.

○**김상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 이것은 노동부장관이 챙길 일이 아니라 총리가 직접 챙기셔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명박 정부에게 당부드립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연민이라도 가져 주

십시오.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서 진정한 녹색 뉴딜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기만하는 녹색의 가면을 벗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조원진 의원입니다.

제가 18대 국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깨끗한 정치, 소통하는 정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현재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전 정치 보좌관으로서 이 국회에 있었던 우리 국회의 관행이 21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깃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부와 국회가 소통하지 않고, 여와 야가 소통하지 않고, 동과 서가 소통하지 않으며, 남과 북이 소통의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치는 국민의 정서에서 더욱더 멀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가진 쪽에서 가지지 않은 쪽에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소통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국회도 감았던 눈을 뜨고, 닫았던 마음을 열고, 막았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정말로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를 들으셔야 합니다. 몰락하는 중산층의 아픈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아픈 피눈물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좀더 자성하는 마음, 좀더 예의를 갖추는 마음, 좀더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

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4대강 운하 사업, 물길 잇기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방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 명칭이 종결한 것 같은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동안 강이 제대로 살아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강이 제 모습, 제 기능, 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아까 김상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 대책이 아니지요?

홍수·가뭄에 대한 대책도 하지만 수량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하천 만들어 가지고 좀 살기 좋은 하천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문용어로 ‘치수, 이수, 친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이 있다면 가물 때는 물을 내줄 수 있고 또 홍수가 지면 그 물을 담아서 빼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물이 기능 제공하는 데 끝나지 않고 사람들 삶에 필요한 환경적·복지적·문화적 조건 또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서 4대강 사업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목적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4대강 사업의 총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원진 의원**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약 14조, 18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많은 문화적 수요가 수반될 것이

고 또 지천 그리고 셋강 살리기 사업이 동반되면 사업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따라서 지금 14조 사업은 1단계 본류를 살려내는 4대강 살리기 첫 사업의 사업비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본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얘기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어가 맑아야 밑에도 맑아질 수 있다는……

○**조원진 의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어가 탁한데 어떻게 밑에가 맑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조원진 의원** 지금 4대강 사업의 모든 계획은 본류를 정비하고 본류를 고치는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류나 셋강은 환경부에서 맡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조원진 의원** 본류는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조원진 의원** 주최 기관이 국토해양부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의원님, 순서적으로 보면 또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천·셋강·지류, 말하자면 하천의 물과 동시에 오염원 또 기능성을 풍부하게 해 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본류 살리기를 하면 낭비 내지는 중복 부분 또는……

○**조원진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이만의** 가장 이상적인 게 될 겁니다. 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진 의원** 사실은 제가 여쭙어 보는 이유가 본류에 중심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천이나 지류나 셋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고 지금 4대강 사업의 본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표를 보시면 지류나……

도표 좀 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류나 셋강의 지금 물 수질 상태가 3급 공업

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4대강을 끼고 있는 지류, 샛강이나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과연 4대강 지류나 샛강을 정비하지 않고 본류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은 엄청나게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강수 조건이라든지 재해 대책 차원에서 보게 되면 4대강에서 특히 낙동강이나 영산강, 금강 모두가 지나친 퇴적으로 인해서 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투자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제방 기능도 약화되어 가지고 만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국지성 호우를 수반해서 예고 내지는 예상을 넘어서 오게 되면, 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훨씬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4대강 본류에 대한 살리기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현명하게 지천 내지는 샛강, 도랑 등과 함께 정비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원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원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의 힘이 좀 국토해양부에 밀리기 때문에 샛강이나 지류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걱정해서 말씀드리는데 5월에 마스터플랜 세우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의원 그전까지 지천이나 샛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예전에 없던 물 환경 사업으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수생태 회복, 하천의 건강성 회복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을 그러지 않아도 추진을 할 텐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적 하천 관리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고, 따라서 먼저 추진되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부터 저희 환경부와 환경 전문기관 또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시행착오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분을 앞으로 더 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예전처럼 환경과 경제를 놓고 다투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지금 대운하 문제가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도표로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91년 이후의 낙동강 오염에 대한 일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사실은 91년도에 폐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조원진 의원 2009년 1월 12일 다이옥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열네 번의 중금속, 발암물질, 독극물…… 낙동강이 열네 번의, 매년 한 번씩,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냐? 1000만—부산·경남, 대구·경북 1000만—이 먹는물의 원수입니다.

저 도표를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낙동강 물은 우리가 먹는 음용수로는 그 한계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번 1, 4-다이옥산 문제를 계기로 해서 방금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영남 지역의 식수원으로서 가장 소중한 기능을 하는 낙동강에 대해서 온 국민이 재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작년 늦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가뭄 그리고 봄에 평년 기준의 강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가뭄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낙동강이 근본적으로 유지수량이 매우 부족하고 또 유지수량을 충족하거나 보충해 줄 수 있는 담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다이옥산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낙동강이 우선 식수원이기도 하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 국토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천의 유지수량을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수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끝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알맞게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1월 12일 일어났던 1, 4-다이옥산 문제는 사실은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원인 규명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규명하고 3분의 2는 배출의 규명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9개의 합섬업체가 배출을 한 그것도 지금 통제를 못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출하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가뭄 때문에 나오는 부분,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존경하는 우리 조원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금 강조하시는 대로 저희도 명색이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또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비전을 감안할 때 낙동강 수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 지금 낙동강 물에는 1300종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페놀이라든지 1, 4-다이옥산이라든지 중화 폐수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규명을 못 하는 물질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물질이 발암을 일으키고 어느 물질이 해독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낙동강 물을 다시 정화를 해서 쓴다는 것은 이제 한계가 왔다,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방금 의원님 강조하신 대로 앞으로 영남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의 취수원이나 취수 방법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개선되고 걱정이 안 되는 쪽으로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1300여 종의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되면 국가위난사태입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철저하게 챙기라는 뜻으로 영남에서 잘못 관리하면 그처럼 많은 이물질이나 위해요소가 낙동강에 투입될 수도 있으니 좀더 철저하게 챙기고 잘하고 단

속해라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조원진 의원** 제가 그 자료를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을 넣고 난 다음에 만약에 먹는 음용수, 수돗물에서 위해적인 물질이 나왔다,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느끼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취수원이나 취수 방식을 바꿔 가지고 또는 보완해서 간접 취수 방식을 앞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낙동강변에 연접해 있고 또 도시들이 팽창 일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도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노후, 소프트웨어를 보완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1, 4-다이옥산 문제는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가뭄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았던 오염농도가……

○**조원진 의원** 장관님,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다만’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1000만 명이 먹고 있는 수돗물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매년, 지금 열네 번의 독극물 위해물질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꾸준히 지금까지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공단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완충 저류시설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제도화를 시켜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히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린다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후에 모든 산업공단,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측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나니까 물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환경 요소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단속을 소홀히 한 나머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도 창출과 보완의 측면에서 함께 걱정해 주시기를 저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한승수 국무총리님 좀 뵙겠습니다.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 환경 중의 또 핵심은 사람이 먹는물이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원진 의원** 우리 1000만 부산·경남, 대구·경북민들이 먹고 있는 물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5월 마스터플랜 만들 때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총리님의 먹는물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요, 물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물 없이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기, 즉 탄소 문제하고 물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이번 3월에 굉장히 큰 제5차 세계물포럼이 이스탄불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이것을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식수하고도 연결을 해서, 특히 낙동강 하류, 또 영산강·금강·한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류 지역에 주거하는 기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물에 대해서만은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원진 의원** 한 가지,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 1월에 10만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사실은 실업 대란이고 실업 공황인데 말이지요.

전임 경제 수장이신 강만수 장관이 4% 성장에 10만 취업 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원진 의원** 한 달 만에 윤증현 장관은 다시 -2%에 20만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다, 취업자 수가 줄 것이다……

같은 한국에서 단시간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선 강만수 장관이나 윤증현 장관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증폭되면서 성장률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3%일 때는 물론 강만수 장관의 예고가 맞았지만 지금 윤증현 장관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2%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고 그러면 따라서 일자리가 준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느 연구소도, 어느 국제기구도 정확하게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로 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4%라 할 정도로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이렇게 예측의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성장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가 조금 초기보다 나빠지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원진 의원** 제 생각에는 초기 경제 팀에 대한 경질 시기를 놓쳤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사실은 4% 같으면 한 9조~12조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악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무총리 한승수** 과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재정부장관을 했든 간에 세계경제 위기를 막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급격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었고, 나름대로 강만수 장관 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윤증현 장관이 경제 수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던 강만수 장관 팀들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교훈을 받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원진 의원** 중국에 수출량이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작년에 96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130조를 수출했습니다. 미국 수출이 460억 불이고 일본이 280억 불에 비하면 두 나라 합친 것보다도 180억 불이 더 많습니다.

○**조원진 의원**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특히 올 1월에 우리 전체 수출이 32.8%가 감소했는데 중국의 경우는

36.8%가 감소해서 평균 감소율보다 중국 수출 신장률이 더 줄었습니다.

○**조원진 의원** 1월 달이 38.6%거든요, 감소율이.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8% 경제성장이라는 게 상당히 위태롭고, 만약에 5%로 떨어지게 되면 한국의 고용이 45만 7000명 정도가 준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주로 원부자재 수출인데 앞으로 중국시장이 중국 정부에서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수시장이 확대될 때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저희들이 하루속히 세워 가지고 중국시장을 공략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미 지난 1월부터 지식경제부에 대중국비상수출대책반을 만들어서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문제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불행하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출감소, 수출감소에 따른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되면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로는 중국 때문에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그렇습니다.

○**조원진 의원** 4월 달에 G20 국제금융정상회의가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조원진 의원**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나라가 내년에 G20의 의장국이고, 올해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4월 2일에 G20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신자유주의 금융이 이제는 완전히 몰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융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신자유주의 금융제도가 몰락했다기보다는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에 감독기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의장국이기 때문에 트로이카, 소위 세 나라가 의장국인데 올해 의장국, 작년 의장국, 내년

의장국 그래서 작년은 브라질이고 올해 영국이고 내년에 한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한국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세계 금융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2차 대전 이후에 브레이튼 우즈를 만들 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4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감독 문제하고, 또 금융시장의 인테그리티 문제하고, IMF, 또 세계은행개혁작업반 해서 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 네 팀을 만들어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에 착수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의 대안이 전 세계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적지 않게 중요한 요소로 취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다보스에 가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고든 브라운 총리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특별히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원진 의원** 아마 올해 G20에서는 보호무역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가지고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원진 의원** 이번 기회에 사실은 돈벌이에 치중하는 투기산업의 금융 역할보다는 실질산업 쪽으로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하여튼 금융감독체계를 좀더 단단히 만들어야 되겠고, 또 금융시장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이드 트레이딩 같은 것을 막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결혼 열 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 가정이고, 우리 전 국민의 2%가 다문화가정입니다.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다문화가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광주의 다문화센터, 인

천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거의 1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 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매년 결혼의 14%가 외국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6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고 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한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도 적지 않은 사회적인 소요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국격을 굉장히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하고 잘 통합이 되고 우리 사회에, 특히 거기서 나와서 길러지는 아이들이 거의가 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아이들이니까, 또 어머니가 외국에서 왔을 때는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하고 해서 제일 걱정은 그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생겨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막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 갔을 때 필리핀 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자기가 시댁에서 구박받고 하는 것은 다 참겠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한국말 몰라서 나 공부 못 가르쳐서 학교성적 떨어진다고 할 때 제일 슬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을 언어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외국서 시집 오거나 장가 온 사람들의 나라에 대한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결혼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쌍방향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에 온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우리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 폭력만큼은 막아야 되거든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조원진 의원**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정의 59%가 좀더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것이 아시다시피 결혼 중개자들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을 맺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 철저한 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을 맺어 줄 때에 정말로 연이 잘 맺어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민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연만 맺어 주고 중간에서 돈만 받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정부로서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감독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말을 배우는 영유아 교육 부분입니다. 영유아 교육 부분은 좀 더 정부가 나서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격 문제라든지 대학특례라든지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하시고……

○**국무총리 한승수**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 지금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많이 관할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이 한 100만 세대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기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재외동포위원회가 총리실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물론 외국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거기에서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문제도 다룰 수 있으면 다루려고 하고 있고, 100만 명이라고 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그분들한테 코리아 드림, 꿈과 희망을 우리 정부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원진 의원** 감사합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님 잠깐 나오시렵니까.

사회안전망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신빈곤층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임시일용직 700만 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일용직 중에서는 300~400만의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의원** 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지금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정치권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영희** 비정규직 대책은 지금 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제도를 고치려면 좀 근본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발언할 때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럴 때 근본적으로 대책을 생각한다면 왜 이런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생겨났는가, 그 원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경직된 하나의 고용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 확산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종전과 같은 이런 전형적인 하나의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고용양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기업이 보다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려면 이런 모든 현상을 다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당장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 누구냐, 그럴 때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기간제로 곧 해고위기에 당면한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심각한 비정규직의 예를 든다면 기간제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파견을 한다든가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하청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실은 더 어려운 비정규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노동부로서는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다를바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당장은 해고의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를 우선 우리가 구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책

을 강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구요. 그건 우리 경제구조의 전체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 상황이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참 불행한 상황인데 올 1월 달에 전년 대비를 보면 임시일용직이 26만 7000개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지금 실직급여 신청이 엄청나게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해고 상황의 특징은 상당히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져서 어떤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갈등이 양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변지대에서,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지대에서부터 지금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정규직지대, 그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일용직,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구조가 악화되니까 또 점점 그런 형태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고용보험으로 일용직도 지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내려갈수록 가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고용기간이 짧으니까 실업보험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8개월 단기적으로는 3개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간이 짧고 짧은 사람들의 경우에 3개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고용위기가 오래 갈 경우에는 3개월보다도 더 지속 일자리를 못 구할 경우에 개별연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두 달을 더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노동부에서는 그것으로도 좀 어렵다 생각해서 적어도 한 6개월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달 더 연장을 해서 지금 개별연장급여를 3개월로 해서 그래서 우선 어려운 시기를 좀 견딜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졸업시즌인데 말이죠, 46만 명의 대학생하고 취학을 못한 1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취업인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

이 있어야 됩니다. 16년 동안 아들 하나 때문에 허리끈 조여 맨 어머니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대책은, 쏟아져 나오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더구나 대졸 실업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든가 IT 산업이라든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고용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경제로서는 그런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직장은 사실상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 외국에 나가서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청년인턴제다 등등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또 그분들의 하나의 실습의 기회 이상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그냥 교육부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70%가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55% 이상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체감으로는 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동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실업에 대한 임시적인 일자리라도 우선 여러 가지 인턴제든 뭐든 좀더 그것을 확장을 해서 우선 금년 위기를 1년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제도로 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1사1촌 운동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조원진 의원 1사1학과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사실 저희들도 빈 일자리 채우기 TF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도 한 10만 개 정도의, 저희 워크넷에 들어와 있는 구인업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게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청년세대들은 눈높이가 높아 가지고 그런 데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런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은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기대하는데 그런 데서 제공되는 임금은 1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취업촉진수당과 같은 것을, 그 차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도 구상 중입니다마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눈높이를 조정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원진 의원 현장에 있는 그러한 노동부가 되시기를 정말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어렵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자영업이 도산할 때 노동부장관께서 현장에 있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맹자편에 보면 득도자 다조, 실도자 과조(得道者多助, 失道者寡助)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진 정치를 행하는 자에게는 도우는 이가 많고 어진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말 정치, 폭력 정치, 아집 보다는 어진 정치가 이긴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조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문희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대공황 이후 세계 최대라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디어발전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우리나라에서 언론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의원** 그렇다면 새 정부 들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의원** 지난번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부 방송의 편파 보도로 사실을 왜곡하는 바람에 국가가 큰 혼란을 겪었고 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방송의 보도가 일부 상당히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혹시 탄압하거나 통제를 사후에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언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억압을 했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강승규 의원** 용산 사태가 최근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강승규 의원** 일부 급진 세력과 언론에서는 법과 원칙 또 어떤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을 외면한 채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한 측면만 강조해서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었고 결국 정부는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는 그런 전철을 밟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너무 언론이, 또 일부 세력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 측면만 강조를 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런 너무 지나친 어떤 비판 보도, 지나친 한 측면의 강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 사실을 시정해야 된다, 또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것을 강조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보도의 내용이 적절했든가 아니었든가 하는 것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늘 워치(watch)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모니터링 결과를 아마 체크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최근에 미네르바 사건이 문제가

됐기도 했고요. 또 유명한 자살 사건으로 사이버 모욕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최진실 사건에서, 유명 연예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이래서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글을 순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표현의 자유 또한 헌법적으로 보장된 일반적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되 미네르바 사건처럼 거짓말할 수 있는 자유, 또 유명 연예인 사건에서 사이버 악성 댓글, 악플 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욕설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물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몇 가지 사례를 짚어 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미디어 자유는 상당히 보장돼 있고 현재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디어발전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부분의 산업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디어시장, 지금 정상적이고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 시장이라든지 신문 시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융합 시장에 있어서 미디어 시장이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이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미디어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는 미디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발전적인 모습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어시장, 결코 앞으로 비전 또 지금의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퇴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광고시장, 작년에 경제상황도 어려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문·방송 할 것 없이 매출이 줄고 각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미디어시장의 현재의 어려움이 불균형 발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들은,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또 TV, 위성 TV라든지 케이블 또 DMB 등, 또 최근에는 IPTV까지 많은 그런 채널 부분이라든지 플랫폼들은 발전해 왔지만 이에 결합해서 서비스될 콘텐츠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분야들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인 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칸막이 구조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금 우리 미디어시장의 큰 침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현재 특히 인쇄미디어 부분이 아닌 전파미디어 부분에 있어서의 독과점 현상 이것은 1980년대 초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이런 불균형 발전도 문제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인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지금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2012년까지 지상파 TV를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선언적 법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촉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라든지 또 케이블방송 등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조금 전 강 의원께서 2012년 말까지 디지털화시키는 것을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명백

한 실행 계획이 따르는 법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2년 말로 해서 아날로그 방송은 종료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방송사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어서 디지털화 시키는 데 국민 모두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 특히 미디어 선진국들이 대개 2012년을 시점으로 해서 디지털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I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선진화의 언덕을 넘으려면 2012년의, 2013년부터 시작될 디지털화 시대에는 결단코 주저하거나 영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직 활기찬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다시 한번 물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사들이 디지털 TV로 전환하는 데 따른 어떤 공급 측면의 준비,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상당한 부분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방송기관들의 영업 사정이 안 좋았고 모두 알다시피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우리도 그 태풍 속에 몰려 있기 때문에 금년 혹은 내년, 향후 준비해야 될 3, 4년 기간 동안에 과연 경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를 참 가슴 조이게 보면서 가능한 대로 그 시한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측면, 방송 어떤 산업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 방송시장의 규모를 보면 2조원에서 3조 5000억 원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 같은 기간대에 통신시장은 10배 정도 성장을 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송이나 통신, 지금은 융합한 경우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지만, 지금 그 두 가지 큰 축에 있어서 보면 방송시장의 시장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는 지체되어 있고 또 열악한 수준이다 이

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지금 우리 현실에서 광고시장을 중심으로 방송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열악한 상태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방송시장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0.8%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라고 하면 우리 GDP 규모를 대충 1000조로 생각했을 때 약 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8조 되는 것을 갖고 인터넷으로 나누어지고 인쇄매체로 나누어지고 전파매체로 나누어지고 보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갖고는 언론·미디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견해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처럼 GDP 대비 광고시장 규모가 1.3~1.4% 되는 수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0.4%만 늘린다 하더라도 4조 원 규모의 방송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광고시장이 그만큼 커지면 언론매체에 돌아가는 파이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한 언론매체에 투여되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지향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미디어 여러 관계 법령이나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지금 사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계절음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선진국들은, 또 미디어 선진국들은 지금 발빠른 변화를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외 선진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고 듣고 오신 것들을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 좀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제가 사실 구라파 쪽을 둘러보고 일본, 미국 쪽을 다음에 둘러볼 생각을 하고 구라파 쪽으로 갔었는데 국회 일정이 있어서 시간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만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이 2월 6일이었는데 2월 5일 날 프랑스에서는 미디어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프랑스가 미디어 그룹을, 기업 그룹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디어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방송뿐 아니라 인쇄미디어에서도, 지금 사실은 인쇄미디어가 전 세계적

으로 아주 영향력도 감소되고 수지도 맞지 않고 해서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때문에 인쇄미디어의 발전도 아울러 모색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상당히 시사를 받은 바가 많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전파미디어뿐 아니라 인쇄미디어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방송·신문 경영 문제는 이미 흘러간 얘기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제가 BBC를, 참 제가 언론기관에 있을 때부터 ‘저런 방송이, 저런 미디어가 한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유심히 살렸습니다.

BBC 관계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와 BBC가 견해가 다를 때가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BBC 관계자들이 서슴지 않고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정부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BBC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그 긍지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KBS 같은 공영기업이, 공영미디어가 그러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송관계, 예를 들어 머독 같은 사람은 신문과 방송을 영국 사람이 아닌데도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부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강승규 의원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지난 80년대에 아날로그적인 미디어 빅뱅, 케이블TV라든지 위성TV 등 아날로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빅뱅이 일어난 이후 지금 90년대부터 벌써 저희보다 훨씬 빨리 디지털 미디어 빅뱅을 준비해 오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께서 다녀오신 프랑스라든지 영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하루빨리 미디어발전법들을 통해서 빨리 현실화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리 언론 상황도 점

검을 했고 또 해외사례도 지금 위원장께서 다녀 오신 바대로 점검을 했고 우리도 서류를, 자료로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디어발전법 이 부분이 과연 이런 선진국과 어떻게 차이가 나고 아니면 방향성이 같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7대 미디어법을 상정을 해서 현재 5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미디어 선진화와 미디어 산업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 민주화를 넘어서 콘텐츠의 다양함, 소비자 주권의 회복 이런 등을 통해서 미디어 선진화를 해야 되고 또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산업도 국가 산업의 중요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그러면 지금 7대 미디어법 법안 성안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해 5월부터 미디어특위를 발족 준비를 해서 9월에 정식 발족하고 관계 전문가, 학자 등과 해서 7대 미디어법을 마련했는데요.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이 정부도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혹시 이런 조항은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한나라당이 공식 발의한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강승규 의원** 예, 한나라당이 준비를 하고 정부 여당도 검토를 같이 한 그 법안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사실은 디지털TV의 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도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2012년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큰 미디어 경쟁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원 촉진책을 마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융합적인 환경에서 신문이라든지 방송, 또 뉴미디어 간의 그런 어떤 수직적 장벽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산업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도 유도하고 장벽을 허물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이 신문·방송 겸영이라든지 대기업 투자 유도, 또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일부 허용 등의 요체입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뉴미디어로 등장한 사이버 매체들이 미디어로서의 어떤 권한을 가지려면 책임도 따라야 된다,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이나 이런 부분 또 언론으로서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보상, 어떤 구제책을 마련하자는 게 세 번째 요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왜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하기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은 어떤 견해든지 간에 국회의 단일안이 정부로 이송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론 장악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 장악이라 함은 제 견해로는 권력기관이 사전 또 사후 통제하고 보도를 통제하거나 물리적 탄압을 하거나 또 아니면 대주주가 되어서 편집권,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저는 장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디어발전법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그럴 의도가 있습니까? 법을 통과했을 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제 직을 맡고 난 후에 수도 없는 경우에 거듭 밝혔습니다. 언론 장악할 힘도 정부에는 없고 언론 장악을 할 의지도 없다, 또 우리 시대에 어느 누구도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사람은, 조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두 번째, 또 이런 음모론을 제기 합니다. 조중동에 의한 언론 장악이다,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을 합니다마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지난해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매체가 영향력 있냐 했더니 KBS 32%, MBC 21%, 조중동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있다는 조선일보는 3.8%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상파방송에 의한 언론 과·독점인데요. 조중동에게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어느 매체가 어떤 신생 방송국이 중편 방송이라는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 %의 장악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언론을 누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겸영을 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 자, 또 하나의 비판이 있습니다. 재벌방송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조항이라는 것이 지상파방송의 20%까지 대기업에 투자를 허용한다는 부분입니다.

20% 투자로 경영권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면 일반 기업에서 5%의 지분으로도 대기업군을 지배하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군을 얘기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법을 들여다봤더니 현행에도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 법에도 방송사의 대주주가, 1대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강승규 의원 자, 그러면 대주주가, 어떤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의 20%를 소유하고 그 관련 기업이 또 다른 어떤 몇십 %를 소유해서 실질적인 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 방통위 허가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야당이 비판하듯이 대기업에게 방송을 장악하게 내줄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마 지금은 금지돼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에 20% 범위 안에서 허용해 주는 걸로 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서 법안이 입법화된다는 치더라도, 20%보다도 개인소유 지분이 49%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언론사가 20% 수준으로 관여한다는 치더라도 최대주주는 될 수 없습니다.

(문희상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신문사나 대기업들이 최대주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해 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언론의 대기업

또 언론사의 겸영을 허용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 정신에 어긋나는 쪽의 허가는 결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승규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방통위원장님과 몇 가지 살펴보았지만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법에 대한 논쟁 참으로 가짜논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발목잡기식의 일방적 비방입니다. 이러한 허위, 가짜 바로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말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발목 잡는 발목당의 오명을 이제 과감히 떨쳐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미디어발전법도 지금 성안해 냈지만 상정해서 토론하면 무엇이 독소조항인지 또 무엇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인지 토론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을 상정해서 여러 야당과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나온 대안들을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에 우리 미디어가, 우리 방송이, 우리 신문이, 여러 뉴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법령을 정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를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발전법, 대한민국 선진화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디어 개편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강승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봄을 건강하게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입니다.

2월 국회도 온통 언론 문제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청와대 이메일, 그 발상과 집행 그리고 후속처리까지 저는 이 사건을 우리의 윤리 수준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징후이며 경고의 신호로 이해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주변의 도덕적 파탄의 신호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여야가 충돌했던 언론 관련 법안도 크게 봐서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새삼

스럽게 당시의 분노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 문제로 다시 싸워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을 것인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빅딜을 하자. 가칭 언론미디어산업발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이슈들을 빅딜하자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계에는 첨예한 이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영 미디어랩 문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편성 PP, 특히 지역 방송에 충격이 큰 사안입니다.

여야 간의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문과 대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 그리고 IPTV와 MMS 등 뉴미디어 문제,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 광고 등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 디지털 전환 재원 문제, 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재정 악화 문제 등입니다.

이 문제들은 각각 독립된 문제들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고 연결된 문제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순차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안처럼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언론 관련 위원회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명한 미국의 허친스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1944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왕립 언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47년, 61년, 74년 모두 세 차례 운영됐습니다. 독일에서는 93년에 바이체커위원회, 그리고 가장 가까운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작년에 코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중에 허친스위원회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구성은 학자 등 21명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증언 청취 58명, 언론인 등 인터뷰 225명, 2~3일

간의 집중적인 회의 17번, 문건 학습이 176회였습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는 신문과 방송 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언론과 광고업계, 현업 단체들 그리고 뉴라이트 등 보수적 단체, 진보적 언론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문방위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가능하면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대표께서도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한 문제를 문방위에 전권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모래 있을 문방위에 언론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분법으로 선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구조로는 서로 간에 퇴로가 없습니다. 또 다시 충돌만 있을 뿐입니다. 가칭 언론·미디어 산업 발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야가 충돌했던 쟁점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언론법이 단순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문이 방송을 충분히 겸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석세스TV를 소유하고 있고 한겨레가 낚시 채널, 조선일보가 경제정보 채널, 중앙일보가 골프 채널, 매일경제신문이 MBN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위성방송에 33%, 케이블 망 사업에도 33%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오락 등에는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신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방송을 겸영하고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군데에만 참여를 막아 났습니다. 바로 보도 분야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어떤가?

역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 삼성과 대우, 현대가 방송에 진출했습

니다. 현대 계열 금강기획이 HBS 등을 운영했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서 스스로 철수한 것입니다. 누가 막은 것이 아닙니다. 위성방송의 경우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가 KT, TU미디어는 1대 주주가 SKT입니다. 이외에 케이블 망 사업 등에 무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에는 참여 제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도 얼마든지 방송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단 한 곳에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 분야입니다.

외국 자본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대폭 열려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 자본은 스포츠 채널인 MBC ESPN, 음악 채널인 MTV 등 19개사에 진출해 있습니다. 케이블 망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 자본에 장악이 돼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CJ헬로비전은 맥쿼리가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의 경우 스카이라이프의 2대 주주가 JP모건입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방송사업에 49%에서 33%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외국자본의 경우에도 보도만 막아놨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은 방송의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막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도뉴스에만 규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보도전쟁이라고 요약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보도를 둘러싼 갈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보도매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보도는 돈벌이가 되는 산업도 아닙니다. 또 뉴스가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신문 방송의 경영이나 대기업 방송진출이 금지돼 있고 이것을 풀면 큰돈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법이 통과되면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역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2만 6000개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

는 언론·방송 종사자 전체를 합친 일자리 숫자와 같습니다. KBS 같은 방송사가 5개나 생기는 수치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명백한 허위의 수치입니다.

동의대 문종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3021명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외국의 예도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론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타임워너 같은 미디어 그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디어 그룹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CNN이나 ABC 같은 방송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5%에서 15% 정도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를 해외에 팔거나 금융산업, 교육산업에 진출해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법안 한두 개 갖고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산업은 금융과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M&A를 거듭하면서 몸집을 키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일부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적자 상태인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해서라든가 디지털 전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자기모순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문제의식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현장의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듣지 않더라도 현장의 얘기는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셨으면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프랑스에 다녀오신 얘기를 하면서 하실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방송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발하고 방송사가 전면적인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것과 같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프랑스에 가서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그런데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안 하시고 정부 여당 법안이 2월 5일 타결됐다 이것을 거두절미해서 말씀하시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얘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월 5일 통과된 것은, 최 의원님도 알다시피 사르코지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미디어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해 왔고 이른바 공영 방송에 있어서의 광고 삭제하는 문제는 금년 1월 5일부터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문순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9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금년 1월 5일부터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해 놓은 과정에서 프랑스 국회가 한 달 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2월 5일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최문순 의원** 그래서 작년 1월 19일에 만들어져서 1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안건 가지고,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 단 하나의 안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1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24일 법안 내놓고 31일까지 통과시키자, 2월에 또 내놓고 며칠 사이…… 지금 한 닷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고 민주당 측에서도 집권하고 있을 때 그러한 법안이, 자세한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구체적으로 성안 작업에 들어가서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올해 방송법 가지고 여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현업들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국회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왜 모르십니까? 공청회를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단순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한나라당 중심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공청회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공청회를 하려다가 지연됐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프랑스의 코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대표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한나라당에서 수용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이미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 측의 의사나 혹은 제사 심의 의사나 그것이 함께 투영되도록 노력을 하면 되고, 심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아마 그 법안을 내놓고 나서 그 법안 가운데 하나도 수정 없이 통과되려니 하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도 충분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감론을박을 해서 국민들 의견도 투영되고 그래서 가능한 최선의 법안이 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사르코지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다가 나중에 사회적 합의인 코페위원회를 수용을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코페위원회는 작년 6월에 구성돼서 한 4개월 동안 존치해서 성안이 됐는데 지난 1개월, 1월부터 사르코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실행에 옮긴 이후에 한 달 동안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CSA 대표되는 분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물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성명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 그것이 곧 질서의 원천이고 그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속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최문순 의원** 하여튼 프랑스에서 채택한 방식을 우리라고 못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회적 논의기구를, 그러잖아도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

시에 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유념하겠습니다.

○**최문순 의원**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디지털 전환자금 그다음에 머독의 신문사 운영, 언론 운영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자금에 관해서 그 디지털 전환자금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나 신문이 들어와서 그것을 충당해 줄 수 있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KBS의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어떻게 그 돈을 대서 바꿔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디지털 자금이 방송과 신문의 경영에 참여하는 대기업이나 언론사들의 돈으로 충당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문순 의원** 그 디지털 전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지 않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바 없습니다. 디지털 자금과 방송·신문의 경영 문제하고는 전혀 결부된 바 없습니다. 혹은 다른 데서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걸 인식한 바가 없습니다.

○**최문순 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다음에 아까 머독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머독이 상업성과, 언론을 상업적으로 만들고 선정적으로 만들고 가는 데마다 구조조정해서 순전히 언론을 돈 벌이로 보기 때문에 기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과업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호주 사람인데 미국에서 외국인이 언론을 가지지 못 하기 때문에 국적을 미국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영국에 가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영국에서 유수의 인쇄매체를 갖고 있고 유수의 전파 미디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국에서도 공익성 심사를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그러한 규정이 사문화하다시피 전혀 발동된 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여론의 독

과점이라든가 이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서 내일 다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최문순 의원** 지금 우리 언론은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 종사자들이 작년 연말까지 수백 명이 1차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론계는 대단히 침체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일자리 대량 창출이니 뭐니 하는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저는 언론과 언론 종사자들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우리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훼손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을 즉시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 속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최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가평·양평 출신 정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죽 지켜보면서 대안 없이 정쟁으로만 치닫는 이런 대정부질문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심한 회의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정쟁의 장인 대정부질문을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하고 회화화하는 이러한 대정부질문이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9년간 문광위를 계속한, 한 상임위원만 계속한 의원으로서 한 가지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김효재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디지

털 전환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방식을 가지고 3년이란 시간을 낭비한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고, 방송·통신융합법 제정에서 경쟁 때문에 4년이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절실한 경험을 해 온 저로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언론을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언론 공적으로 분류되고 수백 건의 항의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러한 역할을 맡은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디어 빅뱅 시대에 우리의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는 반성에서 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IPTV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IPTV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인터넷과 TV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회와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지상파에서 케이블과 위성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전달방식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중심의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의한 IPTV는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상파의 독과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이 통과되면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재벌 방송, 조중동 방송이 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하나 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언론재단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앞서서 강승규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조선일보는 2006년에 3위에서 2008년 5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8위에서 3위로 급격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 모든 신문 합해도 그 영향력이 10% 남짓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문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포털이 매체 영향력에서 신문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지상파 방송의 진입장벽을 풀어서 대기업과 신문이 진입하는 것이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최문순 의원이 새로운 뉴스 채널이 늘면 여론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뉴스 채널이 진입하는데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법안이 여론 독과점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여론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포털, IPTV 등 많은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이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신규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 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이 신문을 보다가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고 요즘은 포털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서 한겨레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셨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셨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겨레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셨다고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봤다고 아마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병국 의원** 맞습니다. 이제 IPTV가 활성화가 되면 IPTV는 영상 포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향후 통신망을 갖고 있는 IPTV의 독과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지상파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불허하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또 겸영을 통해서 여론 독과점이라든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OECD의 경우는 그런 사례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여

러 선진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총리께서는 IPTV를 보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정병국 의원 지금까지 방송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IPTV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IPTV는 일반 방송에 비해서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예, 맞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론 다양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걷어 내고 최소한의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지상파의 20% 내에서 제한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재벌 방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 관련법은 규제를 완화해서 글로벌 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신문의 진출로 여론 독과점을 우려합니다. 저도 대기업이나 신문에 의해서 독과점이 된다고 하면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독과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 정권이 MBC와 KBS2를 민영화해서 여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총리, MBC와 KBS2를 민영화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총리는 몇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재 MBC나 또 KBS2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검토한 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이미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총리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MBC와 KBS2를 민영화하지 않는데 왜 굳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입을 허용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IPTV 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중앙방송의 콘텐츠에 80% 이

상을 의존하는 지역방송은 사실상 고사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송도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M&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0%라고 하는 최소한의 진입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2006년도 현재의 신문법 등에 대한 위헌판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현재의 위헌판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런데 이 법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기형적 법 체계로 3년간 운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대안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위헌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이미 2006년도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지금 논의되는 공영방송법도 당시에는 국가기간방송법이라는 명칭으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2004년도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원천 봉쇄를 하면서 아예 상정조차 시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안 제시조차도 않으면서 논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조금 전에 최문순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2004년부터 5년에 걸쳐서 논의되어서 내놓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방통융합시대에 맞게 후속 조치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도 늦었지만 미디어 관련 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안 제시조차도 없이 거리로만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대안을 당당히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논의의 시작이고 그 자체가 공론화 과정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운운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직무

유기이자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지연술책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감사합니다.

○**정병국 의원** 방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KBS2나 MBC를 민영화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정병국 의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가 뭐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법상에는 공영이니 민영이니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운영에서의 소유 구조라든가 재원조달 방식이라든가 운영에서의 책임 소재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반 국민들이 공영이니 민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KBS와 MBC를 들어서 소유 구조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공영이라고 하고 나머지 방송을 민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정병국 의원** KBS 수신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KBS 수신료를 받는 것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프랑스나 영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을 추가시키자면 우리는 KBS 수신료를 한 달에 2500원씩, 1년에 3만 원을 내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27만 원을 냅니다.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저항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BBC의 관계자들이나 영국 방송 사람들이 '이것은 단순한 수신료의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 향유를 담보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부담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은 없고 상당히 높은 수신료를—수신료라고 하지 않습시다마는—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 같이 저렴한 수신료를 내는 나라가 있느냐고 오히려 놀라는 표정을 보고 수신료라는 이름의 요금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정병국 의원** 지금 지상파 방송사가 공영이니 민영이니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두

광고에 의존하는 상업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KBS조차도 상업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영과 민영의 구분은 단지 소유 구조 측면에서 의미일 뿐이고 방송의 콘텐츠나 채널의 정체성 면에서는 전혀 차별성이 없는 것입니다. 상업방송은 상업방송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방송의 현실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병국 의원**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도 수신료 수입은 4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광고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IPTV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방송시장은 다매체·다채널이라고 하는 무한경쟁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상업주의는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고 시청률의 노예가 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막장 드라마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병국 의원**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아내의 유혹', '꽃보다 남자' 등 소위 막장 드라마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병국 의원** 미디어법을 두고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영방송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무한경쟁에서도 방송의 공영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법을 통해서 KBS는 수신료의 현실화를 통해 보다 더 공영방송사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KBS가 해 온 상업광고를 광고시장에 내줌으로써 광고시장의 숨통을 틔게 하자는 것입니다. BBC가 영국 방송의 무게 중심이고 고급 글로벌 콘텐츠를 상징하듯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한국 방송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사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병국 의원** 총리,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IPTV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TV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신시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가서비스 영역으로 시청자가 드라마의 스토리를 선택하거나 광고의 퀴즈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IPTV 특유의 양방향 서비스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하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이와 같은 임팩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의원** 따라서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많은 투자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정병국 의원** 따라서 올바른 제도를 구축을 해서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 늘리는 데 급급한 나머지 땅따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콘텐츠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방통융합시대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병국 의원** 방통융합시대에 통신망은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공공재인 통신망을 독과점이나 중복 투자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망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을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통신망의 구축에 필수 요건인 전주라든가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비 제공 절차를 중립 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또 전주·관로 등 설비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 제공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 저는 5년 전 저를 포함한 문광위 소속 위원들이 방송통신융합법을 위해서 해외 조

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는 나라마다 “왜 우리나라를 왔느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아주 좋은 소리를 듣고 돌아왔는데,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정쟁으로 비화를 시켜서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디어특위를 만들어서 미디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외국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까 우리보다 이미 IPTV라고 하는 영역에서 5개국 내지 6개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주도로 2015년까지 싱가포르 전 가정 및 기업에 1기가의 접속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하는 ‘IN2015 프로젝트’가 미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들어봤습니다.

○**정병국 의원** 아주 중요합니다.

콘텐츠산업 발전 없는 네트워크 고도화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에서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콘텐츠 분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오늘날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변해 가는 데 반해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더 빠른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상정도 못 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미래의 길은 항상 과감한 용단에 의해 열려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혈맥이 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건설 당시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 역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충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미디어산

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미디어산업에 날개를 달아 주어야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 역시 여론 독과점을 반대합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을 상정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치밀하고 차분하게 논의합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대의 소명에 귀를 기울이는 야당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정병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기탄없는 문제제기와 심도 있는 질문 답변이 전개되었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야 간에 언쟁도 있었고 의석의 소란스러움도 없지 않았습시다라는 대다수 의원들은 모범적인 태도와 금도를 지키고 보여 주었으며 이 점이 우리 국회의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도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대정부질문 제도 자체가 너무 형식과 관행에 쫓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님들은 회의록에 기재해서 명단이 영구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십시오. 모든 법 의안은 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또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와 충실한 심의를 통해서 살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원신상발언

(18시57분)

○의장 김형오 신상발언 신청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특별 당보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과 특별 당보에서 2007년 7월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MB 악법 후색선전의 첫 번째 예로 선정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공동 발의자들을 일일이 거명했기에 이렇게 신상발언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거두절미해서 당리당략으로만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각입니다. 입법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행태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이라는 궤변에 대해 오늘 아침 우리 당의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렸습니다만 차제에 자가당착이라고 했으니 무엇이 진짜 자가당착인지, 출총제와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저지른 자가당착이 진짜 무엇인지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27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 “금산분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시 “한국을 개조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는 출마선언문, 바로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출마선언문에서 출총제와 금산분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 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 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한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2007년 5월 홍준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출마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신은 오간 데 없이 지난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출총제 하루속히 폐지, 금산분리 완화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재벌 구조 때문에 반드시 존치시키겠다고 했던 출총제와 금산분리가 어떻게 해서 1년 8개월 만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로 둔갑했다는 말입니까? 재벌 기업군에 의한 왜곡된 경제 구조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총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금산분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는데 지금 과연 출총제와 금산분리 완화를 허용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투명해졌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당시에 비해 금융위기·경제위기라는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금융 선진국조차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서민 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것이 단순한 쇼에 불과한 기회주의적 작태였는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신을 180° 뒤집은 무소신의 전형인지 홍준표 원내대표 스스로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이 선동이라면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한나라당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한 것이 아닙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차 본회의는 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 의원(26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노식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서청원	성윤환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정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경제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현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장선	정진석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정태	조문환	조배숙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욱철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9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고홍길
구상찬	권선택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성순	김성식	김소남
김영우	김영진	김욱이	김용구
김용태	김재균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형오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류근찬	박보환	박상돈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지원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송영선	신성범	우윤근
유성엽	유원일	유재중	윤석용
이강래	이계진	이광재	이낙연
이범관	이범래	이사철	이애주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주영	이진복
이춘식	이학재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장윤석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병국	정장선	정진석	정해걸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진래
진영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허원제	현기환	홍일표	홍재형
황영철			

○속개 시 재석 의원(63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고홍길	공성진	권영길	권영세
김성순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욱이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태환	김형오	김희철	박대해
박보환	박지원	배영식	백재현
서종표	송영선	심재철	양승조
원희목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이낙연	이애주
이윤석	이주영	이춘석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전재희	전혜숙	정미경	정옥임
정장선	정태근	정하균	조전혁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허범도	허천
홍사덕	홍희덕	황우여	

○산회 시 재석 의원(55인)

강길부	강승규	강운태	고홍길
권경석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조	김소남	김욱이	김용구
김유정	김재윤	김종률	김충조
김충환	김형오	나경원	박병석
박보환	박지원	서갑원	송훈석
신학용	안경률	양승조	오제세
유일호	유정현	이강래	이상민
이용희	이윤석	이은재	이정현
이주영	이진복	이한성	임동규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병국
정태근	정하균	진성호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욱철	최재성
허범도	허천	홍준표	

○출장 의원(8인)

고승덕	김낙성	문국현	윤두환
이병석	이재선	전여욱	정진섭

○청가 의원(6인)

안효대	원혜영	윤영	정몽준
정의화	홍장표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안 병 옥
 의 사 국 장 이 중 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 재 희
 환 경 부 장 관 이 만 의
 노 동 부 장 관 이 영 희
 여 성 부 장 관 변 도 윤

○출석 정부위원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 중 현
 행정안전부
 제 1 차 관 정 창 섭
 제 2 차 관 강 병 규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최 시 중

【보고사항】

○의안 제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김동철·김영진·김우남·김성순·김효석·김중률·홍재형·김성곤·김재운·박기춘·김상희·박주선·우제창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이한성·손범규·김성수·조윤선·백성운·고승덕·임동규·황영철·서병수·유재중·송광호·이사철·고홍길·윤영·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최구식·임영호·유기준·김태원·안상수·이윤석·이학재·박선영·권영세·신성범·김성수·안효대·임동규·이성현·유원일·김효석·신상진·정해결·김소남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임동규·임두성·원희목·손숙미·이달곤·이애주·김성태·안상수·이인기·안경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이성현·김우남·한선교·이한성·임동규·김성수·손범규·박준선·신학용·강석호 의원 발의)

2월 1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이애주·정영희·손범규·김성수·안상수·임동규·김옥이·윤영·이한성·원희목·안형환 의원 발의)

2월 18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권경석·허범도·윤영·김성조·이명규·정두언·최구식·신성범·김정권·여상규·이인기·김소남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허태열·홍장표·안홍준·문학진·이재선·이인기·이경재·최욱철·손범규·강용석·조원진·박대해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09. 2. 17 손숙미·김성수·손범규·백성운·신지호·박준선·나성린·이화수·안상수·안효대·김소남·강석호 의원 발의)

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4대강 살리기 사업 업체선정 기준변경에 관한 질문서

(2009. 2. 17 김광립 의원 제출)